
목민광장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2017 November vol.13



민선6기 지방자치 평가와 전망

기획

지방자치가 바뀌면, 우리 삶도 바뀐다

기고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방향과 시민사회 활동방향

목 _ _ 민

광 _ _ 장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2017 November vol.13

목민광장

2017 November vol.13

목차

006

발간사

대한민국 혁신,
지방정부가
이끌어 갑니다
이동진

008

특집 좌담

민선6기 평가와 전망
홍미영 김윤식
이동진 이재은
소순창 권기태

025

기획

026 지방자치가 바뀌면,
우리 삶도 바뀐다
송정복

기고

036 시민사회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김제선

040

인터뷰

아름다운 여주시, 행복한
시민
주철현

044

칼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김승수

048

하늘아래

시민이 가장 행복한
도시를 꿈꾸다
구본영

064

이슈&포럼

20차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068

21차 포럼

쿠바 도시농업 현장을
가다

072

22차 포럼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모색하다!

086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01 민관협력 재난관리의
필요성
이다현

090

02

행복, 시민의 목소리로
불륨을 높여라
오지은

094

03

인구 과소화에 대응한 농촌
마을의 경제 활력 제고 방안
김현수

098

04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99일의 여정
백희원

102

목민광장 12호를 읽고

김유선

106

목민광장 12호를 읽고

이은경

110

현장을 가다

낯은 창고, 청년을 품다 :
순천시 청춘창고
정환훈

114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향후 지방정부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6기 지방자치가 3년을 넘기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해도 평범한 때가 없었지만 특히나 민선6기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승리라 인정받는 촛불시민혁명에 이은 새로운 정부의 탄생,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적폐의 청산, 과거사 진상규명과 회복 등 큰 의미를 지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민선6기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민선5기 흐름에 이어 청년정책, 동북지회브화, 메르스사태에 대한 능동적 대응, 안전도시 구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 등을 다양하게 시도하며 지방자치를 성숙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2할에 불과한 지방재정구조, 강력한 중앙정부 통제 방식의 행정 시스템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지방정부의 혁신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동안 중앙정부 사업예산의 지방정부 전가, 복지사업에 대한 갈등, 지방재정개편을 둘러싼 논란 등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의 전개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수장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까지 드러났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혁신, 지방정부가 이끌어 갑니다

이동진 목민관클럽 상임공동대표(서울 도봉구청장)

목민관클럽에서는 민선6기 4년을 되돌아보며 『목민광장』 13호를 준비하였습니다. 민선6기 지방자치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의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특집좌담에는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과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과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을 모시고 민선6기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지방정부의 장 두 분과 세 분의 전문가들은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도 혁신적인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거버넌스,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주민참여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긴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조직체계가 지방자치 혁신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성장하는 지방자치를 오히려 중앙이 제한하는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새정부의 과제로 자치분권 개헌과 함께 자치제도 개선을 급선무 과제로 꼽았습니다.

기획으로는 민선6기 혁신정책들을 소개하고,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하여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의 기고를 실었습니다. 그간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이뤄낸 소중한 경험을 정리하여 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체적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당부도 함께 담았습니다. 모쪼록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넘어 사회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불평등 심화, 높은 청년 실업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개편 등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더불어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변화와 혁신이 미치는 전국적인 부작용을 지켜보았습니다. 급변하는 미래는 확일적 대응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그간 행정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지던 정책과 사회적 대안들은 시민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집 좌담에서의 말씀처럼 분권은 중앙-지방 사이의 분권뿐 아니라 행정-주민사이 분권을 포함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민선6기를 되돌아보며 그동안 많은 혁신적 성과를 거둔 각 지역의 주민과 지방정부의 수장 및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선7기에는 보다 나은 혁신을 위해 목민관클럽이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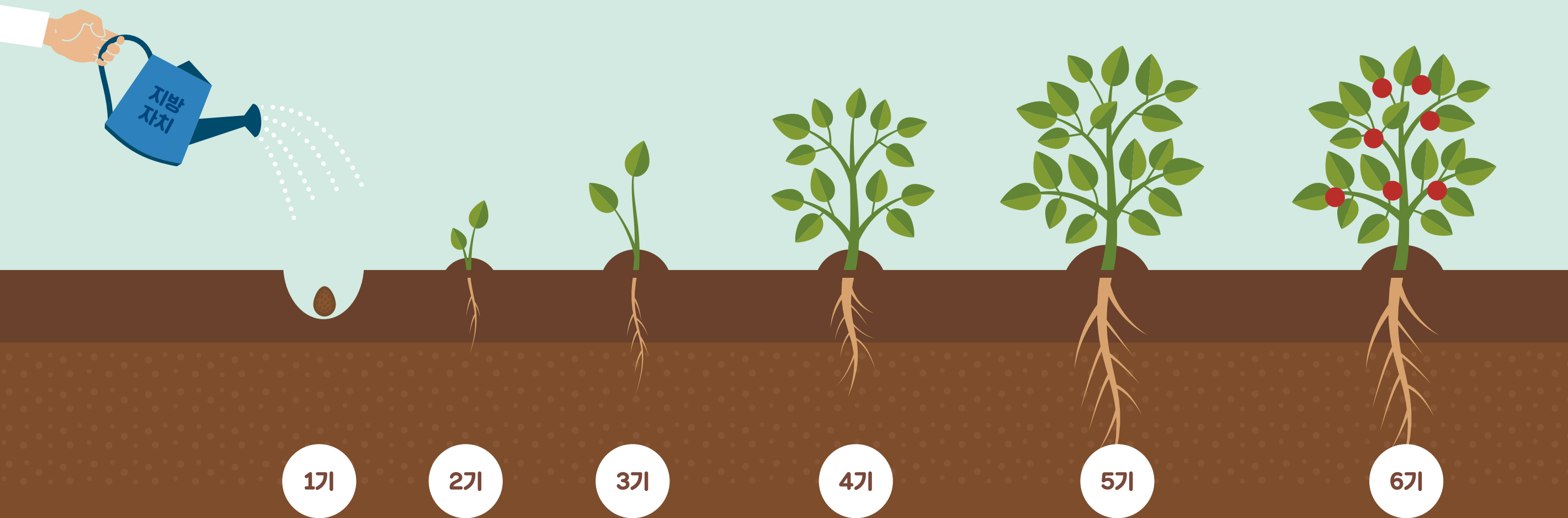
목민광장 13호
특집 좌담

민선6기 평가와 전망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6기 지방자치가 4년째 마무리로 접어들었다. 민선5기에 이어 시민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며 청년정책, 동북지허브화, 메르스 사태에 대한 능동적 대응, 빅데이터 기반 수요자 맞춤형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2할의 지방자치라는 근본적 한계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예산 지방정부 전가,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 지방재정개편 논란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

지난 5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내세우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 높은 청년실업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4차 산업혁명 대두와 노동시장 개편 등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무거운 대응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13호 특집좌담은 민선6기 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목민광장 13호

특 집 좌 담

민선6기 평가와 전망

좌장

이동진 목민관클럽 상임공동대표(서울 도봉구청장)

토론자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일시

2017년 10월 18일(수) 15시~17시

장소

용산역 itx회의실

혁신과 연대로 자치역량을 쌓다

이동진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덧 민선6기 지방자치가 3년을 넘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험난한 시기였지만 목민관클럽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는 민선5기 흐름을 이어 지역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민선6기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단체장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학자께서는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홍미영 민선5기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저런 정책을 구상하면서 욕심을 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다. 반면, 민선6기는 극히 제한된 지방자치 권한이지만 천여 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자치혁신을 위해 매진했다.

가장 먼저 공무원들의 인사를 공정하게 적소적재에 배치하도록 했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치분권, 참여예산 주민교육도 시간이 될 때마다 진행했더니, 민선5기보다 협치를 진행하는데 수월해졌다. 시민과의 거버넌스를 토대로 국방부와와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바로 인접한 부천시 경계지역에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려는 것을 지역 상인들과 연대하여 대응하기도 했다. 행정위원회에도 여성이 의무적으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미미해서 시설투자 등은 미약했지만,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역량은 많이 키워졌다고 본다. 아울러, 5기에 비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이 많아졌다. 사회적경제협의회에 이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치분권협의회 등이 많이 생겨났다. 중앙정부와의 관계보다는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이 활발해졌다. 사회적경제 분야도 구정이 아니라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니 인천시 지원을 받기도 수월했다. 다만, 의회와의 관계는 정당이나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어 풀기가 힘들었다.

이동진 홍 청장님은 지방자치 행정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앞장서 도입해 주셨다. 민·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토대 위에 행정이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현재 100여 개의 지방정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양한 협력과 연대가 중앙정부와는 무관하게 지방자치 혁신의 힘이 되고 있다.

소순창 민선5,6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다만, 혁신적인 단체장들이 민주당 출신들이 많은데, 정당별, 지역별로 지방자치 혁신 성과들이 확장되면 좋겠다.

이재은 민선5,6기 지방정부 간 협력과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은 역설적이게 중앙정부와 관계 때문이다. 민주당 단체장들이 혁신적인 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니 중앙정부의 견제가 있고, 이에 대응해서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의 상호 연대와 협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영유아누리고정예산 부담과 지방재정 개편, 청년수당 등 각종 복지정책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참여하게 대립했다. 물론, 일부 자유한국당 단체장들의 혁신적인 활동도 보인다.

김윤식 제 생각에도 민선6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을 자치행정의 주체로 바로세우는 과정

이었다.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등 거버넌스 관련 사업들이 두드러졌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별 지방정부의 연대활동도 두드러졌는데, 이는 목민관클럽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본다. 다만,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20여 단체장들만이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한계는 있다. 이들의 특징은 60년대 생, 80년대 대학시절을 보낸 세대로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고 이끌었던 비슷한 사회 경험을 가진 이들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다. 시흥시도 주민자치 강화를 고민하면서 행자부에서 추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받았다. 사실, 시흥시는 행자부보다 먼저 실질적인 주민자치 보장을 위하여 토론회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법령의 제한 때문에 불가능했다. 자치의 핵심인 결정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행자부가 정한 법령과 지침 때문에 불가능했다. 아무리 혁신적인 단체장들이 많아도 현실의 법제도를 넘지 못했다는 점이 민선6기의 한계였다고 본다.

권기태 다른 관점에서 민선6기 지방자치의 큰 특징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지방자치의 안정적 리더십과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민선5기 때는 시도했던 다양한 실험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의문도 있었다면, 민선6기를 거치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성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의제들을 발굴하고 확산하였다. 주민자치 활동으로 마을민주주의를 확장하고, 경제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정착시켰다. 영역이 나눠져 있던 교육에서도 다양한 혁신적인 실험들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분야

에서도 중앙정부가 무능함을 보일 때, 지자체가 먼저 조직을 만들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방자치의 꽃, 주민자치가 피어나려면?

이동진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민선6기 지방자치는 큰 틀에서 지방자치의 근본,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하는 틀을 만들어 왔다고 평가된다. 앞서, 주민자치회 관련 법령상 문제로 더 이상 진척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4개 자치구가 주민자치회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넘겨주는데, 시의 지원으로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마을계획단이라고 하여 마을총회를 통해 마을의제를 설정하고 행정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지난 2년 동안 진행해 왔다. 그런 실험을 밑바탕으로 이번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도 비슷한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막상 현장의 준비와 공감없이 진행하니 지금은 형식만 남아 있다.

김윤식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면서 구성원 선발과정을 달리하니, 형식화된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다만,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 법제도가 안되어 어려웠다. 인력도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채용하라고 했지만 관련 규정이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았다. 결국, 주민자치회에서 미리 인력을 선정하고, 형식적으로는 시에서 공고

를 내 선정된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홍미영 그래도 시흥시는 자치시이니 가능하다. 광역시 자치구는 더 어렵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광역시의 눈치와 감시를 많이 받는다.

이동진 중앙과 지방정부 갈등도 있지만,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갈등도 있다. 광역과 기초 사이의 위상과 역할을 좀 정리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다.

소순창 민선6기 지방자치를 자치분권 측면에서 보면 좀 답답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았는데 별 진전이 없었다. 토크쇼만 하고 말았다. 중앙정부에서 제 역할을 못하니 지방정부가 자치분권을 적극 요구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을 중앙정부가

끌어내린 것은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서울시도 자치분권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새롭게 열리는 주민자치가 일반 주민들까지 참여가 확산되고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새로운 기득권층이 생겨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면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제도 정착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기태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국정과제로 전면내세울 수 있었던 배경중 하나는 민선5,6기 지방정부가 내용적으로 절차상으로 자치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동진 김대중 정부 시절 중앙차원에서 지역을 혁신할 계획으로 제2건국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였는데, 결국은 지역 명망가 중심으로





되돌아갔다. 지역차원에서 새로운 시민역량이 성장하지 않을 경우 중앙차원의 혁신은 어렵다. 우리의 목소리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목소리도 있다.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니들은 뭐냐?’ 하는 반감의 목소리, 갈등이 있다.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의 성과들이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의미가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한 자치혁신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다.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

이재은 2000년 초부터 자치분권 운동을 하고 있다. 분권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지방자치하면 되지 왜 분권까지 해야 하는데?’, ‘분권하면 뭐가 좋아지는데?’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분권은 참여정부 시절 재정과 기능의 지방이양으로 확실하게 방향

이 설정되었다. 그 기반위에 민선5,6기 민주당 중심으로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선도적 흐름들은 자유한국당 등 다른 기초단체장들을 자극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 역량이다.

수원의 경험을 보면,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 때도 1시간씩 자치분권 교육을 한다. 그렇게 5~6년 하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만들기 등 주민참여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자치분권 의식이 많이 성장했음을 느낀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 자치분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 내에서 행정권력을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돌려주느냐는 것이다. 사실, 앞서 직접민주주의 사례로 언급한 주민자치회는 광역-기초로 나뉜 중층 행정구조를 단층구조로 개편하려는 데 따른 반발을 읍면동 주민자치회 강화로 무마해 보려는 불순

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정말 주민자치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가려는 의지는 없었다고 본다. 그러니 시범으로 실시했던 31개 주민자치회 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었겠나. 시범사업으로 2억 원의 국고 지원 외에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고, 결국 상당 수 주민자치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달려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민자치회 평가를 해보니, 70%가 문제 있다고 한다.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추천, 당연직, 추천 방식으로 각각 1/3씩 구성하는 것에 대해 지지도가 높았다. 이렇게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실, 주민참여예산도 동별로 실링을 주거나 지역회의를 구성하는 것 등은 얼마든지 집행부의 권한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가능한 것은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김윤식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중앙관료들은 지방자치 역량이 미흡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동진

지속가능한 자치혁신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다.

많이 한다. 지방공무원들의 수준이 낮고 주민자치역량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미 준비된 주민도 많고, 빠르게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주민들을 믿고 권한을 주면,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집행하고 책임을 진다. 민선7기 지방자치의 흐름도 이렇게 이어진다면 지방자치의 질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홍미영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다양한 실험도 하고 확산도 하는데, 의회가 걸림돌이다. 지방의회는 중앙 국회의원들에게 종속되어 있다. 국회의원들도 옛날보다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의원들이 많다.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중앙관료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의원, 중앙관료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단체장출신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적극 진출할 필요도 있다.

이동진 소극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방분권은 절실하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듯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업은 실패했을 경우 미치는 파장, 피해가 크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정책은 설사 실패했을지라도 미치는 파장이 제한적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중앙정부의 재난대응 행태 등을 겪으며 많은 교훈을 얻지 않았는가.

소순창 중앙부처 관료들을 보면 보수적, 반자치적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정권에 따라 입장들이 바뀌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중앙관료들은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치분권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김윤식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관료들은 여전히 지방자치 역량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소위 중앙 엘리트 관료들은 지방과 주민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체화되어 있다.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물론 그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데에는 그동안의 역사와 이유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개헌에는 국민들이 80% 이상 동의하는데,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에는 50% 정도에서 동의한다. 안타깝지만 국민들도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다. 중앙관료들의 불신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자구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

소순창 저는 중앙관료들은 집단주의에 빠져 있다고 본다. 미국의 쿠바 미사일 사건처럼 자기들만의 생각, 논리에 빠져 사고하는 ‘그룹싱크’(Group think)에 처해 있다.

김윤식 중앙관료들을 중앙부처에 발령하기 전에 지방자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1년 이상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도록 제안했는데 잘 안되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니 중앙관료들이 그들만의 리그에 빠진다.

이재은 그룹싱크는 어디에나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중앙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몇 년씩 준비하며 공무원이 된다. 실력은 비슷하다. 결국 권한 싸움이라고 본다.

이동진 중앙과 지방의 권한 싸움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가 지방자치 분권을 주장하는 밑바탕에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라는 가치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저변을 확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언론에서 끊임없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제기한다. 이것도 어떻게 극복할지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재은 그런 것들이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중요한 논거이다.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지방공무원들을 그렇게 길들여 온 측면도 있다.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정부는 지시하는 대로 실행만 하게만 들어 났으니 자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없었다.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자치분권을 가로막고 있다. 가령, 인구가 1/3, 1/5로 줄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났다. 이게 주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능한가?

그런데 실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지방교부세이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세출을 기준으로 재정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에 전년대보다 세출이 줄어들 수가 없다. 그러니 예산 지출도 절약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 인원도 행정수요에 따라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데, 분야별로 인원을 제한해 놓아서 지역사정에 맞게 조직 운영을 탄

력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도를 설계해 놓고 지방자치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대통령을 만나면 적극 설득해야 한다. 현장의 경험을 적시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일본이 지방분권개혁을 할 때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함께 중앙정부 관여를 법으로 제한하였다. 우리는 법률이나 시행령뿐만 아니라 훈령, 지침, 통첩, 고시나 심지어 전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는다. 지방정부 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요구를 어느 정도 무시하고 안 따를 수 있겠지만 지방공무원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 너무 큰 지방분권 그림을 그리기보다 지방자치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핵심기제를 찾아서 한두 가지 만이라도 확실하게 바꾸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정당공천제 문제는 지역정당으로 풀어야

이동진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다. 민선6기 지방자치의 한계,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다.

김윤식 지방정부는 민원사무 처리 규정이 있어서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각종 지방정부협의회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들은 1/3이 미검토, 1/3이 수용불가, 1/3은 담당과장 전결로 내려온다. 지방정부는 각종 규제, 법령 검토를 거쳐 힘들게 제안하는



홍미영

국회의원. 중앙관료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단체장출신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적극 진출할 필요도 있다.

데, 중앙정부 관료들은 불성실하게 답변한다. 국회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매우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부분은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더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의회 폐지론이 나왔을 때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했다.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정당공천제의 폐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거대 정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고, 기초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는 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대의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대선구제도를 정치제도 개편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재은 정당공천제 문제는 15년 전부터 논쟁이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인데, 정당공천제



이재은

너무 큰 지방분권 그림을 그리기보다 지방자치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핵심기제를 찾아서 한두 가지 만이라도 확실하게 바꾸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를 폐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당법을 고쳐야 한다. 현재는 정당설립요건을 중앙당이 수도에 소재해야 하고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이 1천 명 이상 되어야 한다. 현재 존재하는 양대 정당을 제외하고는 소수정당은 설립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에 필요한 인물을 뽑는 것으로 전국정당이 필요하지 않다. 지역에 근거를 둔 정당을 인정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그룹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도 지역정당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이다. 지역정당이 가능하면 지방의회 의원들도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정말 정치개혁 의지가 있다면, 당장 가능한 이런 것들부터 실천해나가야 한다.

김윤식 저출산이나 저성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정책의제들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하신 정당법 개정문제까지 지방분권, 지방자치 의제로 받아 안고 적극 대응해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민선 5,6기에서

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앞으로 민선7기에서는 더욱 힘있고 규모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게 큰 과제이다.

소순창 저는 오랫동안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지방자치위원장과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경실련은 정당공천제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는데, 정당정치나 대의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정당정치 시스템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로 연결되는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되는 시대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정당정치가 어렵지 않겠는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앙정당이 기득권을 휘두르는 정당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지역정당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자치현장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게 폭을 넓혀야 한다. 국회는 중소선거구제를 유지해도 된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 오사카 신당이 오사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인근도시인 나고야와 연대해서 규모를 확장하고 중앙정당과도 경쟁한다. 정당공천제의 문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생활자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시대변화를 준비하는 지방자치

소순창 앞서 중앙정부가 자질구레한 지침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불편하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엉뚱한 방향으로 쓰게 만든다. 지난 번 토론회 때 차성수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관련 사업 보조금이 금천구로 23개가 내려온다고 한다. 중앙정부 사업도 있고 서울시 사업도 있는데, 합하면 몇 억 원이 넘지만 각 사업마다 꼬리표가 붙어있어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쓰는 실정이다. 그 예산을 하나로 모아 지자체 차원에서 기획해서 쓸 수 있다면 유용한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한 지자체가 1억 원이라면 전국적으로는 226억 원이 불필요하게 쓰여 지는 것이다. 대구의 어느 지자체에서는 둘레길 1.5km를 조성하는데 약 100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 기존 도로를 줄여서 만들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다는 것은 의문스럽다.

힘 있는 국회의원 동원해서 중앙정부 보조금 받아 그렇게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문이 든다. 지방자치, 생활자치가 바로 서려면 교육,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은 지방으로 과감하게 기능과 재원, 인력을 넘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혁신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국고 보조금 개수를 직접 조사해 보니 2,450개가 넘었다.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금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국가 재정지출 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뒤쳐진다.

권기태 지방자치분권 강화라는 큰 방향의 혁신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방향에서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다. 앞서 의회와의 갈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의회가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발전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지방의회 강화를 위하여 정당공천제 등 선거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경계를 넘나드는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사회적경제 등 기존 행정체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들인데, 융·복합 행정이 가능하도록 행정체계의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자치제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한데, 지방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업무량도 늘어나고 혁신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간지원조직 확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장을 중심으로 영역이 겹치거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통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협치를 통해 기존 시민사회역량들이 행정에 결합하다보니, 본래 시민사회역량은 성장하지



권기태

지방의회 강화를 위하여 정당공천제 등 선거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못하고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자치행정 중심으로만 지역역량이 성장하고 있는데, 지방 자치, 주민자치가 확산되려면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 경제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kaletsky)는 자본주의의 본질은 위기를 통해서 재구조화 하는데, 현재 자본주의 4.0은 2020년 이후 위기에 봉착한다고 전망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유경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유경제도 지방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영역을 넘나드는 초연결이다. 개인의 자원들을 서로 연결만 해도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민선5,6기를 지나면서 지자체가 많은 하드웨어와 콘텐츠들을 만들었는데, 이들을 서로 또는 새로운 영역과 접목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도봉구가 돌리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돌리와 문화, 돌리와 어르신, 돌리와 과학 등을 연결해야 한다. 박물관이 지역과 만나고, 과학과 만나는 등 기존 자원

들을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은 두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소교수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사이에서 권한 배분, 재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적해 주셨다. 이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제기된 문제인데, 논의만 있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두 번째, 권부소장은 시대변화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

먼저 새로운 변화, 공유경제는 중국에서 잘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이식되었으니, 공유경제가 확산이 쉬웠다. 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유가 익숙하지 않다. 차를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자원의 이용측면에서는 훨씬 효과적인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공동체적 가치, 공유경제의 개념이 역사 속에서, 사회의 변화 속에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가치의 전환이 있어야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이 가능하다. 가치의 전환을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중앙, 지방정부 모두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만들기보다 기존의 시설, 센터 등의 기능을 전환하고 서로 연결하면서 주민교육이 함께 이뤄진다면 새로운 변화는 가능하다. 소교수님이 지적한 문제는 15년 넘게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을 잘 짜야 한다.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할 핵심과제와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을 잘 구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전공인 재정분야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하신 1,450개의 국고보조금 문제는 사무관 하나당 보조금 하나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산자부나 중소기업부, 복지부 등 사업부서는 사무관 한명이 보조금 하나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바꿀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보았듯이 개별사업을 평가해서 이양한다는 것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일본도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일괄해서 넘겼기 때문에 재정분권이 성공할 수 있었다.

김윤식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행정혁신, 지역재단으로 정리하고 싶다. 세상이 통합, 융·복합, 초연결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방향을 행정이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가 문제다. 현재 행정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본다.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도 정부3.0이라고 해서 개방, 개혁, 혁신을



김윤식

중앙관료들을 중앙부처에 발령하기 전에 지방자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내세웠다. 저도 앞서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상도 받아보았지만, 현재 조직자체가 융·복합 시대의 혁신을 담아낼 수가 없는 구조다. 앞으로 민선7기에는 조직혁신을 주요 키워드로 삼아야 한다. 앞서 권부소장이 제기한 문제의식, 민선5,6기를 거치면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이 시민사회역량을 흡수하면서 시민사회가 많이 약화되었다. 저도 중간지원조직을 8개나 만들었는데, 점점 필요성에 공감한다. 시민사회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튼튼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려면 자립형 지역재단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가려면 사회연대 금융 등의 지역재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 자치의 힘으로 이루자

이동진 시간이 10여 분밖에 남지 않았다. 아직 다루지 못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김윤





소순창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앙정당이 기득권을 휘두르는 정당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식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정리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김윤식 지방분권 개헌은 결론적으로 우리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해서 싸우느냐가 관건이다. 대통령, 행안부 장관의 의지는 확인했다. 다음 주에 법정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여수에서 개최된다. 대통령이 중요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제기되었던 중앙 관료들의 저항, 기재부의 저항을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물리치고 나아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결국 그 힘은 국민들의 요구에서 나올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현재 논의수준을 보면 안을 내기 힘들 것 같다. 결국 대통령 안으로 개헌안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정당과 국회에서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홍미영 얼마 전 인천지역 구·군협의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다양한 시민들과 케이블TV등 지

역 언론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목민관클럽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지방분권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지역에서 풀어낼 때에는 한 두 지자체만으로는 힘들고 함께 가야하는데, 속도가 느리다. 그래도 같이 가야 힘이 생긴다. 지방의회도 함께 가야하는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의회는 어떻게 연대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다. 희망제작소에서 지방의원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동진 지방분권개헌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민선7기를 전망하면서 자치분권개헌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하다. 분권개헌이 이뤄지면 순차적으로 자치분권이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하위법령 정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과제이다. 법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개선할 것들도 많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당장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지방정부 매칭 부담이 거의 똑같다. 이런 측면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것이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정부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직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바뀌나가야 한다.

소순창 현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방향은 옳지만 내용이 부족하다. 너무 중앙정부 관료에 포획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방향이 균형발전에 치우쳐 있다. 인력배치도 그렇고, 정

책도 그렇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다르다. 균형발전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 돈 내려주면 다들 좋아한다. 열심히 공모에 응하고 하는데, 일부 공모에 당선된 지자체는 좋아하지만 떨어진 지자체는 정부에 부정적으로 돌아서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자치분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성장 시절의 “경제기획원”처럼,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융합하여 사회가 성장해야 할 오늘날에는 “사회성장기획원” 같은 중앙부처 조직의 신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재은 문재인 정부 구성을 보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되지 못하고 따로 관리되고 있다. 두 정책을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치분권 개헌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여당이 느껴야 한다.

김윤식 현실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이 폭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선7기를 전망하면서 민선6기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권기태 자치분권을 확보했을 때 뭘 할 것인가도 먼저 고민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데 앞서 말씀하신 경제, 평생학습, 보건복지 등을 통합해 낼 수 있는 것이 유엔에서 밝힌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닌가 싶다. 형식측면에서 자치분권과 6:4도 중요하지

만 내용측면에서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김윤식 그런 측면에서 민선7기 지방정부의 모델,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 희망제작소에서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작업을 비롯해 공동의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한다.

이동진 현장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학계의 평가를 통해 민선6기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았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시작되는 민선7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들이 존재한다. 많은 단체장들이 이런 요인들을 잘 활용하고 극복하는 기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한 단계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좌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획

-
-
- 지방자치가 바뀌면, 우리 삶도 바뀐다
 - 시민사회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지방자치가 바뀌면, 우리 삶도 바뀐다

송정복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본 글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목민총서 4권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글의 일부를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들어가며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의 충격 속에서 2014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6기 지방자치가 벌써 4년차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민선6기 지방자치는 무능한 중앙정부 아래에서도 곳곳하게 주민과 소통하며 생활밀착형 의제들을 발굴하고 확산해 왔다. 세월호 사건이나 그로부터 1년 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던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증후군)사태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 현장은 긴밀한 대처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었다.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했던 동북지허브화는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부혁신3.0과 창조경제가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면, 지방정부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감(感)에 의존하던 행정에서 과학행정으로 혁신하고 있다. 주민참여도 활발하다.

시흥시 청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기본조례를 직접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제정하기도 하고, 종로구 주민들은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행복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양한 자치혁신의 실험은 여기까지이다. 8 대 2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서 보듯이 자치재정권은 2할에 머물고 있고, 자치조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도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당면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년수당을 도입하려다가 제지당했다. 지방분권이 절실한 이유이다.

다행히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하며,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은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3년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민선5기 지방자치혁신사례들을 모아 목민총서 1, 2, 3권을 발간하였으며, 민선6기 사례를 포함하여 목민총서 4권을 준비 중에 있다. 지방자치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지방자치 무용론을 넘어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이다. 이에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자치혁신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을 다지다

민선5,6기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치행정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치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집행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하도록 기회를 주며, 평가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해오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재정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현재 243개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운영형태는 다양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치는 수준에 머물기도 하지만, 민선5,6기를 거치며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실험과 제도개선을 통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민선6기 변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서울 성북구가 2016년부터 도입한 무작위 추첨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다양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이끌어내는 일이다. 사실, 지역회의나 참여

예산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가 쉽지 않다. 지역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기존 참여자들이 중복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성북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ARS를 통해 참여를 원하는 주민 300명을 선정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심층 면접을 통해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위원 후보자 35명을 최종 선발한다. 다양한 주민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의 공정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공개 모집된 주민들이 모여 최종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다. 주민총회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현장투표를 실시하는데, 투표 전에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홍보전이 치열하게 펼쳐진다. 2017년부터는 공개모집한 주민 300명을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ARS를 통해 200명을 선발하여 총 500명이 원탁회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한다.

경기 시흥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늦게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하였는데, 매년 운영결과와 평가를 적극 반영하며 주민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2012년 제도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운영까지 하는 주민자율사업을 두었다.

2013년부터는 시민단체와 지역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추천 위원을 추가하고 기능별 분과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민중심의 제도운영을 시작하였다. 보통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상임위와 연동하여 주제별 분과를 구성하는데 반해, 시흥시는 기능별 분과를 둔 것이다. 특히 기획홍보분과는 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찾아가는 예산학교 같은 교육과 홍보, 주민참여예산한마당 총괄 등 제도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제도의 실질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시민강사양성교육'을 통해 심화과정을 이수한 참여예산위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참여예산교육을 진행하면서 주민중심의 제도운영을 위한 주체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포켓몬 고를 잡아라

2016년 7월 포켓몬이라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증강현실을 결합한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출시되면서 전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는 지도보안문제로 초기 출시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속초, 고성, 양양, 울릉도 등 일부 국경지역 도시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에 속초시는 시를 방문하는 포켓몬 고 트레이너들에게 안전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면서 속초를 홍보하고자 발 빠르게 '포켓몬 고 전략지원사령부'(언론 행정 관광 안전 환경위생지원대로 구성)를 편성해 운영했다. 언론지원대는 속초 시내 주요 관광지에 포켓몬고 게임실행 홍보영상과 게임지도를 제작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방송,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재하였으며, 행정지원대는 게임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포켓몬 고 불게임 충전소 위치도면을 제작·설치하였다. 관광지원대는 시티투어버스 운영코스 개발과 이벤트 사업 발굴, 주말 엑스포유원지 분수대 주변에 전투력, 파워, 포켓몬 최다수집 등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 획득한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포토존을 조성하였다. 환경위생지원대는 트레이너 밀집지역의 환경·위생관리로 안전한 먹거리와 편안한 잠자리 제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바가지요금 단속, 포켓몬 관련 할인행사 참여업체를 확대해 나갔다.

속초시는 또 포켓몬 고 트레이너들이 온라인 장에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충전서비스'를 기존의 관광안내소 외에 속초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등 15곳에서 추가로 제공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등 이용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무료 공공와이파이존 안내판 8개를 제작·설치하였다. 포켓스탑(충전소)과 포켓몬 고 체육관 위치, 속초시 공공와이파이·무료 배터리충전소·속초 8경의 위치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검색 할 수 있는 '포켓몬 고 온라인 통합지도'도 제작해 운영하였다. 이병선 속초시장장은 포켓몬 고 게임 트레이너와 관광객들을 위해 포켓몬 고에 등장하는 캐릭터 '웰로우 박사'를 코스프레한 '속초마을 시장 겸 포켓몬 박사'인 '이박사'를 자칭하고 7월 23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포토타임 행사를 가졌다.

포켓몬고 효과로 서울~속초간 고속버스 운행이 하루 36회에서 72회로 늘어나고, 포켓몬 유저만을 위한 여행상품이 생겼으며, 주변 상가의 매출은 평소보다 1.5~2배 상승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속초시가 NHK, 알자지라, CNN 등에 포켓몬 고 태초마을로 방영됨으로써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세계적인 홍보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미국 인터넷신문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서 집계한 가장 많이 본 동영상 7선에 이병선 속초시장의 포켓몬 태초마을 촌장 인터뷰가 선정되었으며, 조회수 92만, 도달수 340만을 기록해 5위에 선정되었다.

한옥마을 남부시장 야시장을 열다

남부시장은 전주시의 대표적 전통재래시장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밀려 침체일로에 놓여 있었다. 전주시가 이런저런 활성화 대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별로였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전국적인 명소이자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한옥마을'이 지척에 있음에도, 남부시장으로 관광객을 유도할 만한 요소를 좀체 찾지 못한 것이다.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남부시장으로 끌어올 만한 비책은 없을까? 전주시는 이런 고민 끝에 2013년 안전행정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자 매주 금·토요일 7시부터 자



정까지 야시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남부시장 내 십자로 150m 구간에 이동식 매대 45개(먹거리 31, 수공예품 11, 사업단 홍보 3)를 설치하고, 매대 주변 식당가 50개소와 함께 분야성을 조성했다. 사회적기업들과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와 공산품을 판매하는 한편, 십자로 중앙무대에서 비보이 공연, 연예인의 류경매 등 문화 이벤트를 상시 개최하면서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길 하나 건너편인 남부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SNS, 블로그에 남부시장 야시장의 호평이 이어져 입소문이 나고, 전통시장 대표 성공사례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남부시장과 시장 2층에 새로 조성한 ‘청년물’을 벤치마킹하려는 발길들이 이어졌다.

물론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기존 상인들의 기득권 주장으로 마찰이 지속되어 사업이 좌초될 뻔한 순간도 있었다. 이에 전주시는 야시장 운영위원회(시, 상인회, 청년물, 매대운영자, 전문가 등)를 구성해 중재하며,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요인이 해소되고, 매대운영자들의 음식재료를 남부시장에서 구입하는 선순환시스템도 구축되었다. 전주시는 앞으로 주말에 한정하지 않고 야시장 운영 일수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상인, 매대 운영자 간 ‘윈윈’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 청년기본조례

고용이 늘지 않는 저성장 시대가 계속되면서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등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5년 1월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권익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생활 안정과 부채 경감, 주거 안정 문제까지 포함된다. 또한 청년 당사자 5인 이상이 참석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도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청년의 사회적 권리 보장을 명시했다는 점뿐 아니라 당사자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 온 청년단체들이 조례문 작성에 직접 참여한 데에 의의가 있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정에 힘입어 같은 해 12월 시흥시 청년 기본조례도 주민 청구 방식을 통해 발의되었다. 주민 청구 방식은 일정 주민 수¹⁾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과정을 주도한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시흥시가 지원자를 공모하여 만든 모임이다. 청년 당사자 활동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정부 부가 나서 청년들을 위한 장을 마련한 것이다. 주민청구 방식은 청년들이 스스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내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지역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조례 발의에 필요한 6,125명의 두 배가 넘는 1만 4,373명의 서명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흥시는 조례 제정과 공포 이후 2016년 사업 예산으로 25억여 원을 확정하였으며,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청년학교 운영, 마을기획 활동 및 골목경제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진행했다. 또한, 2016년 10월 Next경기 창조오디션 시즌2에서 청년협업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들과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내용의 ‘경기청년 협업마을 만들기’로 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간을 조성했다. 시흥시는 이행기에 있는 ‘사회 밖 청년 문제’를 다시 재조명함으로써 단순 일자리 대책을 넘어, 지역 청년들의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펼친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무엇보다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는 공간을 확보하고 사람을 키우는 정책 중심으로 청년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유권자 인구의 1/20, 50만 이하의 시·군·구에서는 1/50을 받아야 한다.



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종로구 행복드림 프로젝트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수준이지만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5천 달러에 접어들고,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에도 국민들의 행복체감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정책은 주민들에게 얼마나 만족과 행복감을 주고 있을까?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종로구는 먼저 20여 명의 직원들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행복에 관한 사례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드림팀’을 신설하였다.

행복드림팀은 정부정책이 주민의 행복체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민생활과 괴리감이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프로젝트의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종로행복드림이끄미’를 구성하였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주민 25명과 기관추천으로 선정된 전문가 5명, 구의원 2명, 공무원 5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 ‘종로행복드림이끄미’는 2015년 3월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들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행복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행복조례’를 준비하고 5,342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하였다. 그러나 의회의 반발로 주민발의 조례제정은 무산되었다. 자칫 행복드림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였지만, 행복드림이끄미들은 포기하지 않고 조례 대표 내용인 행복지표개발, 행복증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 참여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1년간의 협의 끝에 구청장 발의로 행복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행복을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라고 정의한다.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행복 증진 시책의 발굴·추진을 위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주민행복 조사와 정책 반영, 행복 증진 교육 실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도 행복이끄미들은 어떻게 하면 나와 더불어 종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행정의 제안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스스로 민간단체를 설립할 정도로 자발적으로 종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종로의 행복찾기 여정이 가능했던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나가며

이상 민선6기 자치혁신 사례 중 새롭게 시도되었거나 분야별로 의미있

는 사업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지방재정위기가 거론되던 민선5기 본격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한정된 예산을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우선 배분함으로써 정책실효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 아울러, 민선6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함께 주민이 행정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역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치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서울시와 시흥시의 청년기본조례제정과 정책수립사례는 당면한 청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당사자 관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쉽게 실마리를 찾기 힘든 청년문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대응보다는 지방정부가 각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원과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속초시의 포켓몬 고 활용사례와 종로구의 행복드림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던져주었다. 속초시는 지방자치와 무관해 보이는 게임열풍을 방관하지 않고 지역마케팅 전략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기간에 매우 효율적으로 속초시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효과를 얻었다. 포켓몬 고 열풍이 한 달 남짓 이어졌기에 속초시의 대응이 조금만 늦었어도 마케팅 효과는 크지 않았을 터였다. 기회요인을 시의적절 하게 활용하는 행정의 민첩한 대응력도 중요하다. 종로구는 전통적으로 행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끌어왔다. 그것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민관협치의 방식으로 과정을 설계하고 이끌었다는 점이 새롭다. 기존 행정에서 잘 다루던 영역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체적 참여를 통해 지역을 혁신해 나가는 방식은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하였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며, 읍면동 행정혁신과 마을자치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선6기 자치혁신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 현재, 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자치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는 주민자치시대에 열어갈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디 내년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피어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시민사회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www1.president.go.kr)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0개의 전략, 100대 과제, 487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설정되었다. 2천 개가 넘는 대통령선거 공약을 487개 세부 실천과제로 수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많은 의제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는 간단한 제목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세부 과제의 추진 로드맵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탓도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 짓는 것에 대한 정무적 부담도 작용했을 터이다. 그래서 국정과제에 반영된 시민사회 의제가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 어떤 변형과 왜곡이 발생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는 아직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반영되도록, 반영은 됐지만 축소 왜곡되지 않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 규정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를 표방했을 때의 ‘국민’과 이번에 밝힌 국민의 시대의 ‘국민’의 강조점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은 집단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스스로의 권력을 구현하고 실천한다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기표현 가치를 중시하는 개인이 등장했고, 이 개인들이 스스로 미디어가 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실천 흐름을 국민의 시대로 받아 들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이야기 해온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력을 행사하자’라는 주장이 국정운영 좌표로 반영된 것이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시민사회단체의 위치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상시적으로 조직된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도 있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스스로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계획과 입법계획을 보면, 5년간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178조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공약 지출 수요가 151조, 지방이전 재원으로 26조 5천억 원으로 설계되었다. 세입 확충은 경제가 잘되고 핀셋증세로 약 82조 원, 세출절감으로 약 95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세부공약 과제를 실천하려면 이런 규모의 재원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아울러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갈등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재정분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과제 321개를 이행하기 위해 647건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민주당 집권전략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49%의 지지를 얻었고 국정운영 지지도가 80%에 이른다 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국정과제 수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집권초기에는 대통령의 지휘와 행정명령을 통해 긴급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개혁동력을 확보한다는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

연정이나 협치를 만들어갈 여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은 쉽지 않다. 이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당연히 실행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새롭게 구성된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재정계획과 입법계획은 쉽지 않은 미래를 예고한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한꺼번에 확 바꾸자”는 기대가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될 수도 있다는 기대의 제한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와 동시에 압박하고, 더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개혁 입법 활동, 국회와의 협력과 압박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국정과제의 동반자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 시키자는 시각도 있다. 감시자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제시된 과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대안자의 위치를 갖고자 할 수도 있다. 시민사회가 꼭 하나의 태도를 정하고 단결할 필요는 없다.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동반자 역할도 빛나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일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지만 주체적 역량이 없는 시민사회는 참여를 표방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동원될 것이다. 공감과 기대는 높지 않으면서 실력이 없는 시민사회는 차별화의 위치를 갖고 소극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다수의 야당이 취하는 태도도 이처럼 차별화 쪽이다. 한편 공감도 높은데 실력도 있으면 국정과제는 최소의 기준이고 그 이상을 만들기 위해 대안을 만들고 구현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차별화하고 감시하는 것 이상을 실천하는 것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다. 대안자로서 촛불시민혁명이 추구한 정권교체, 시대교체, 미래교체를 위해 시민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때 촛불시민혁명은 ‘성공한 명예혁명’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여수시, 행복한 시민

주철현 여수시장

일시 2017년 10월 18일(수), 16:00
장소 여수시청 시장실

040

여수하면 ‘국가산업단지’, ‘2012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오동도와 향일암’이 떠오른다. 그러나 지금은 버스커 버스커의 ‘여수밤바다’로 더 유명해졌다. 여수밤바다는 젊음과 낭만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여수의 브랜드가 되었다.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지역에 주요 활력소가 되고 있는 여수시, ‘아름다운 여수시’에 ‘행복한 시민’을 꿈꾸는 주철현 여수시장을 만났다.



- 인구 293,036명
- 면적 510.09km²
- 예산 952,360백만 원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하 김) 먼저, 여수는 어떤 곳인가요?

주철현 여수시장(이하 주) 여수는 임진왜란 때 지역 민초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거북선을 만들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호국충절의 고장입니다. 지금은 여수밤바다와 낭만버스킹, 낭만포차, 낭만버스, 최초의 해상케이블카, 밤바다 유람선 등이 함께 어우러지며,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오동도와 향일암, 역사의 섬 거문도와 신비의 섬 백도를 비롯해 금오도 ‘비렁길’, 하화도 ‘꽃섬길’, 돌산 ‘갯길’, 개도 ‘사람길’, 공룡발자국의 사도, 가고 싶은 섬 낭도 등 아름답고 특별한 섬들이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김 민선6기 대표적인 성과 3가지를 꼽으신다면?

주 먼저,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을 돌파

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5% 이상 늘어나 1,400만 명을 넘어 1,5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 2년 연속 ‘해양관광 부문’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7월에는 지방자치경영대상 ‘문화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9월에는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해양관광도시 부문에서 부산, 제주를 제치고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중심 소통행정의 실현입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 공간 확대로 공직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소통대상 2관왕을 차지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전라남도 시 단위 중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민선6기 살림살이가 호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출범 당시, 2014년 채무가 909억 원이었는데, 3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서 618억 원을 상환하여 1995년 민선 여수시장 이래 최초로 일반회계 채무제로(zero)화를 달성하였습니다.

김 곧 동계올림픽도 열리지만 그동안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을 개최했던 시설들이 후속 활용방안을 못 찾아서 지방정부에 큰 부담이

041

되고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행사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요?

주 2012년 여수엑스포 이후 2년 연속으로 300만이 넘는 관광객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여수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시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지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정부의 사후활용계획을 바뀌었습니다.

애초 정부는 부지 및 건물, 특화시설 모두를 매각하는 것으로 잡았으나 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를 지속해서 설득한 끝에 박람회장 부지는 매각, 시설은 매각과 장기임대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계획 변경 후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3개 민간기업과 1,132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16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8월 4일 시립 상설 미술관인 '엑스포 아트 갤러리(EAG)'를 박람회장 내 기념관 3층에 개관을 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들을 박람회장에 유치하면서 도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과 함께 당초 박람회 개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현재의 부지와 시설을 정부로부터 여수시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뭉치면 산다

길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인근 지역과 소통이 원활한 경우에는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기도 하고, 반대로 인근 지역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근 도시와 교류, 협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주 여수의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 매년 2천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생인구는 줄어들지 않는데, 이사를 많이 합니다. 대학 진학으로 타지로 나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것은 지방도시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 여수-순천-광양이 함께 있지만 또 각자 갖고 있는 조건들이 많이 다를 텐데요.

주 그렇습니다. 주거여건은 순천이 상대적으로 좋고, 생산기점은 여수와 광양입니다. 우리도 정주여건중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과 병원문제 해결에 다양한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광역으로 통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일단은 정주인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유동인구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순천, 광양과는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호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3개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실무진 등 30여 명이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30여 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협력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민선6기 들어서 다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개 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시립예술단의 순회공연,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광양만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수·순천·광양 광역교통망 조기구축 등의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3개시 시장이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공동 건의사항 7건과 각 시별 국정과제 건의사항 16건 등 총 23건이 담겨있는 공동 청원문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해 갈등사항 해결과 함께 협력과제, 연계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길 여러 성과 가운데 오랫동안 지역의 이슈였던 여수산단의 환경관리권 위임을 일부 받아 냈고, 여수산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 안전에 관한 문제에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지방정부의 존재의 이유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가산단 공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기도 했는데, 현재 여수산단의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권이 전남도와 우리시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시청과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3종 17개 업체 환경관리권을 도에서 위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형사고 대부분이 1~2종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어 63개 업체에 대한 관리권도 위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도 추진 중입니다.

김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 맞습니다. 시가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등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지요. 바로 시민들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

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시민 30명을 선발하여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단’을 구성하였고, 지난해 10월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여 유관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 15명으로 ‘여수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위원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사항, 사고 예방·대응체계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건 필수입니다.

청년,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필요

김 새 정부 과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수시도 이에 발맞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나요?



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수시도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청년정책을 한두 가지 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상황을 개선하기 힘들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에는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11월에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는 청년활동가 40명을 위촉했고, 6월에는 여수형 청년 사회적 기업이 4개 팀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청년이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여수시 청년정책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청년창업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함께 나누자(참여와 소통)’, ‘함께 일하자(일자리 지원)’, ‘함께 즐기자(관광문화축제)’, ‘함께 꿈꾸자(교육복지)’ 등을 골자로 4개 분야 48개 사업에 635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시장 2층 빈 점포를 청년창업 공간인 ‘청년몰’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2층 66개 점포 중 비어있는 52개 점포 유희공간에 푸드코트, 청년벤처 등 청년창업 점포 27개와 다목적 공간, 지원 공간 등으로 꾸미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동항 수변공원에 청년창업 공간인 푸드트럭 존을 조성했습니다. 수변공원 내 2곳을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하고 주변상권과 다툼이 없도록 영업종류를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으로 한정해서 청년 운영자를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테크니션스쿨은 전문 산업 인력 양성과 청년취업의 산실이 되어 왔습니다. 8개월간 인성과 현장실무, 영어교육 등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8기 과정을 마쳤는데, 32명은 교육기간 중 LG화학, GS칼텍스, 한국바스프 등에 취업했고요. 나머지 교육생들도 현재 여수산단 기업에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7기까지 233명의 수료생 가운데 215명이

산단 주요 기업에 취직해서 취업률 92.2%를 달성했습니다. 더 나아가 산단기업과 인력채용시 여주시민 가점제 적용을 추진했는데, 지난 9월 26일 전국 최초로 GS칼텍스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GS칼텍스는 최초 인력채용부터 여주시민 가점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는 물론 여주시 인구증가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은 분권과 혁신으로

김 끝으로 검사출신, 법률전문가 출신으로 민선 시장을 맡으셨는데, 지방자치에 대해 평가해 주시지요.

주 군대까지 30년 공무원을 했는데, 지방공무원을 해보니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지방자치

라고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규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여수는 전남 제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산단이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환경이나 안전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다 걷어 갑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 어려운 결정을 하겠습니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를 해야 합니다. 세제 개편이 필요하고 예산 등 자율권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혁신해야 합니다. 구태의연함을 바꿔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을 혁신하는데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행히, 목민관클럽으로 함께하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누구보다 혁신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협력하면서 지방자치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건
필수입니다.



전통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복적이며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도시재생과 하천 살리기에도 선도적인 도시, 전라북도의 도청이 자리한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시가 변하고 있다. 시장의 집무실에 들어서면 전주완판본체(조선시대 출판도시였던 전주의 역사성을 담아 만들어진 글씨체)로 씌어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글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항상 “전주스러움”을 앞세우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낚시 좋은 가을, 9월에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이 만났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김승수 전주시장

일시 2017년 9월 28일 오후5시
장소 전주시청 시장실



- 인구 658,388명
- 면적 206.22km²
- 예산 1,429,726백만 원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하 ‘선’) 전주시에 대해서는 여러 칭찬들을 많이 들었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전주는 어떤 도시인가요?

소소재산업, 세계최초 드론축구 개발 등 신산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하 ‘수’)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끊임없이 혁신하는 도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이 알려졌듯이 전주는 도시의 역사가 1천 년이 넘었고, 조선왕조 500년의 뿌리가 있는 경기전¹⁾을 품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이 역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한옥마을을 보존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전통문화의 도시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세계 최초 도심형 국제슬로시티로도 선정되기도 했고, 론리플래닛이 선정하고 CNN이 보도한 아시아 3위의 여행 도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7 FIFA U-20 개막전을 치르며 세계적인 축구도시로서 위상을 다졌고, 미래 신소재로 각광받는 탄

‘전주스러움’에서 혁신을 찾다

선 혁신사무실처럼 집무 책상에 의자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혁신의 아이콘이신데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주에서의 혁신은 어떤 것인가요?

수 최근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음을 강하게 느낍니다. 어떤 몸속 DNA처럼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전주에서도 중요합니다. 최근 모 해외 인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¹⁾ 조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모신 곳. 태종은 1410년 전주·경주·평양에 태조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모시고 어용전이라 하였다. 그 후 태종 12(1412)에 태조 진전이라 부르다가 세종 24년(1442)에 와서 전주는 경기전, 경주는 집경전, 평양은 영송전으로 달리 이름을 지었다. 경기전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광해군 6년(1614)에 다시 고쳐지었다.



대한민국이 비즈니스의 대상은 되지만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을 갈 때 잠시 한국에 들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하더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어떻게 알려지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다운 모습이 알려져야 하는데,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알려지다 보니 한국의 멋이 보이질 않습니다.

일례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볼 수는 없죠. 한국을 알고 싶고, 한국을 꼭 보고 싶다면 저는 전주를 찾아오시라고 말합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점에서는 부여나 안동도 비슷하지만 전주와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웬지 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주는 강력한 문화흡입력, 문화구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지요.

전주스러운 것으로는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물리적 공간입니다. 도시는 기억의 집합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는

편리하고 세련된 도시는 될 수 있지만, 어떤 영감이나 감동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전주는 오래된 원도심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살아있습니다.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잘 찾아내고, 시민이 체화하고, 또 재창조하는 것, 이게 가장 전주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지면 결국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전주답다는 것은 생물의 다양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주천과 삼천에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수달에게 최적화된 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분포도를 조사하고 로드킬 등 위협요소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의 콘텐츠입니다. 전주의 콘텐츠는 독보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예로 들면, 누구나 기술적으로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전주는 전통적인 것을 반드시 가미하려 합니다. VR콘텐츠도 한옥마을을 소재로 하고, AR사업도 지역의

문화재 콘텐츠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수용자 입장에서 거부감도 적고 우리의 것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의미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넘어 혁신으로, 그 험난한 길을 걷다

선 멋집니다. 그런데 통상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때, 일군의 사람들은 분권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균형발전을 훨씬 강조하곤 합니다. 같은 가치이면서도 근자에는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지요. 말씀처럼 좋은 철학을 갖고 있지만 또 선거 시기에는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을 텐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수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일례로

대형쇼핑몰 입점을 둘러싼 찬반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일부 시민들에게는 폐쇄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비교적 젊은 지자체장에 속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쇼핑몰 입점 저지 때문에 수구적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고 불통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점이 매우 마음 아픈 지점이지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시장으로서의 저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포기해야 하고 정치를 해나갈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선 말씀처럼 저성장 시대, 인구절벽 등 여러 문제가 심각해서 전통적 개발방식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지방뿐 아니라 한국 전체가 그러하지요. 그래서 시장님의 정책방향이 맞다는 지지도 강해졌을 것 같은데.





수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보존과 재생은 먼 이야기죠. 현장을 모르니까요. 최근 한옥 마을 주변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6층 고도제한을 발표했는데, 관련된 분들이 시장 주민소환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는 도시재생과 보존이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전주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서울은 이미 초고층이 포화상태이고 대체제가 많아서 고층빌딩이든 대형마트든 여러 개 중 하나를 바꾼 것이지만 전주는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높은 상황이라 시민들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정책목적 측면에서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서울의 혁신모델과 지방의 혁신모델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한 정책

선 ‘가장 전주스럽게’ 옆에 ‘더욱 사람 곁으로’라고 썼는데, 사람이라는 의미는 공간 물질과 다르면서도 다의적으로 느껴지는데, 가까이 다가가려

는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 사람의 지향점은 결국 시민이고, 시민의 행복인데요. 도시의 행복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고, 불행한 사람을 덜 불행하게 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고, 덜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서 총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어떤 것을 취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치나 행정과 무관하게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선택의 문제라면, 우선 가장 시급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불행한 사람을 덜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시민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시의 토목과 건축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주인이 시민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만 가득할 뿐, 시민이 도시의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전주에서는 시민들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역 앞에 첫마중길을 만든 이유도 거기에 맥

이 닿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복지정책을 잘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축적된 경험이 혁신이다

선 내부 공직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데도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웃음). 실제 소통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관료제가 생겨난 이래로, 2천 년 전 로마시대 때부터 힘든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늘 도전해야하는 과제입니다. 저도 이런저런 실패를 많이 해봤는데 실패하는 가운데 성공하는 분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선배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사람’을 강조했던 이유를 요즘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인재를 고르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

련해줘야 한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공직사회 내부에도 시대적 과제를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사람의 혁신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낍니다.

선 문재인정부에서 ‘행정은 관료중심의 공급자가 아니라 시민의 플랫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 이제 우리 사회가 시민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비교적 젊은 단체장 중 한 사람인데, 저도 시민의 변화를 읽어내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외국은 공항 하나를 짓는 데 몇 십 년씩 걸리지요. 시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으면 결국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고(故)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사회를 크게 바꾸는 에너지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된 엄마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커뮤니티는 조

직화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아주 느슨한 고리로 엮여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아주 큰 폭발력을 가집니다. 오래된 시민단체나 노조나 관료사회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요. 이것은 기존의 거버넌스와는 분명 다른 영역입니다.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갖는 힘입니다.

관료사회의 변화는 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하고, 그것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주는 ‘다올마당’(‘다함께 지혜를 모으는 마당’이라는 의미의 우리말 조어)을 통해서 ‘에너지디자인 3040’이라는 에너지자립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외부기관에 의뢰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민들이 스스로 실천과제를 도출한 것이죠. 생태통로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요. 여러 분야에서 관료조직이 시민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경험이 축적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공

직사회가 경험을 축적하면서 지역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 가면 혁신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지역순환 경제전략, 사회적경제

선 영국 협동조합 자치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님 말씀처럼 공직자는 돕는 분들이고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은 주민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실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국 단위로 신설하셨는데, 내발적 지역발전 모델을 선택하신 걸로 보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시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수 제가 영어를 못하기도 하고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요. 허락해 주신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도시의 빈티지(Vintage)함, 유니크(Unique)함, 스타일리시(Stylish)함, 이 세 가지를 꼭 살리고 싶습니다.

도시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가져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람을 불러오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주다움인데요. 전주다움을 찾아가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사회적경제가 경제영역을 넘어서서 도시다움을 찾아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국에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과, 공동체과를 두었습니다. 도시는 물리적 공간과 함께 공동체의 자생력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간조직(도시혁신센터)을 더 크게 키워야 했다는 겁니다. 행정영역은 방대하고 인적자원과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중간지원조직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도 나타났는데, 앞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을 키우면서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통합적 관

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뭔지도 몰랐던 공직사회도 국 단위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근에는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 전주시의 실험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범위를 확장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를 개별사업이 아닌 호혜와 연대의 경험을 생활 속으로 녹아들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전주시에서 전통적인 접근 외에 혁신적 실험이 있다면?

수 저희도 ‘공유경제를 통한 반값생활비 도시’라고 일명 ‘공반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청년과 시민들이 받는 급여가 물가상승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낮춰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공유경제를 활용해 보자는 것이지요. IT가 접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포럼을 몇 차례 진행했고, 2주 전쯤에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경험이 축적되면 좋은 변화가 생길 듯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냉장고의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데, 바코드를 찍어서 냉장고에 두고 유통기한을 관리하는 어플을 만든다면, 이 어플을 통해 유통기한이 남았지만 먹지 않는 음식을 기부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이 함께 동참한다면 엄청나겠지요.

또 ‘행복의 경제학’ 저자인 호지 여사와 함께 3년 전부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개괄적인 총론을 다뤘고, 올해부터는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 사업 중에 지역화폐와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지역 먹거리체계로 전주가 전국 최초로 체계를 세웠고, 서울시가 두 번째 추진했습니다. 저희는 ‘전주푸드’라고 하는데, 직매장 설치보다는 공공급식 식재료 보급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자부심으로 미래를 그리다

선 끝으로 민선6기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포부·비전이 있으시다면?

수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찬란한 전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 찬란함은 우리다움, 전주다움을 찾아갈 때 맞출 수 있는 열매일 것입니다. 전주라는 도시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도시, 복제되는 도시가 아닌 가장 치열하게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 아이들에게 찬란한 전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간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주를 찾아오는 건 전주다움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지원해서 유명해졌는데,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영화제는 전 세계에 수천 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 영화 매거진 <무비메이커>가 ‘세계에서 가장 멋



전주는 강력한 문화흡입력, 문화구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지요.



진 영화제 25'에 전주영화제를 선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주만 뽑혔습니다. 그것은 독립영화의 가치와 전주시민의 용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박근혜 정권 하에서 지원한 것은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최승호 피디의 ‘자백’, ‘귀향’,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 벨’ 등 다른 도시는 상영을 꺼리고 망설였던 것을 전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먼저 나갔죠.

도시의 자부심은 높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용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는 용기가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민의 자부심을 키웁니다. 전주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가장 전주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포부이자 비전입니다. 저는 지난번 촛불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매우 성숙했다고 믿습니다. 시민을 믿지 못하면 지방분권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시민을 믿는다면 진보할 것이고 믿지 못한다면 다시 퇴보할 것입니다.

선 결국 시민을 믿고 분권하고 자치·자결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깊이 와닿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늘 아래 으뜸가는 도시’라는 이름만큼이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천안은 천안삼거리로 대표되는 교통의 요지, 유관순열사와 독립기념관이 위치하고 호두과자가 유명하다. 64만 시민과 함께 행복을 공감하는 도시, 정(情)이 많은 도시 천안(天安)을 이끌고 있는 구본영 시장을 만났다.

하늘아래 시민이 가장 행복한 도시를 꿈꾸다

구본영 천안시장

일시 2017년 9월 12일 14시
장소 천안시청 시장실



- 인구 648,624명
- 면적 636.07㎢
- 예산 14,000억 원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하 김) 천안시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소박하게, 그러나
진심(眞心)을 다해**

구본영 천안시장(이하 구) 천안은 이름 그대로 하늘도 편하고, 땅도 편하고, 더불어 사람도 편한 고장입니다. 옛 삼남의 분기점 천안삼거리에 얹힌 낭만과 멋, 그리고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지요.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충무공 김시민 장군, 석오 이동녕 선생 등 수많은 애국 열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흔히 천안 하면 호두과자나 천안삼거리를 먼저 떠올리고 이것이 모든 것인 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천안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고속철도, 고속도로, 전철, 항공 등을 이용한 사통팔달의 접근성과 11개 대학이 있어 교육환경이 좋고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활력의 도시입니다. 13개 산업단지 882만㎡가 조성돼 있고, 반도체,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등 4,600여 개의 기업에 27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첨단 산업의 메카로 중부권 최대의 기업도시이기도 하지요.

김 천안시 인구가 64만 명이나 됩니다. 충남의 대표 도시인데 어떠한 시정비전을 갖고 계신지요?

구 우리 천안시는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를 재개한 이후로 괄목할만한 외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6기 시정은 ‘시민중심 섬김시정’을 행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시민의 삶을 더 가치있고 품격을 높이는데 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6기 4년차로 도시 정주여건 변화에 대한 시민의 희망과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더 큰 도약, 더 알찬 성장」을 목표로 ▲신성장동력 창출로 천안의 백년대계 준비 ▲나누고 누리는 따뜻한 복지 실현 ▲누구나 살고싶은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백만도시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 구축 ▲품격 높은 문화·체육·교육 도시 기반 마련 ▲도농이 상생하는 살기 좋은 농촌 구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 등 7대 분야 역점과제를 선정해 1,000년을 변형하는 도시를 향해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원대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시려면 어떤 특별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구 우리 시정의 핵심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거창한 어떤 철학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으로서 저의 고향을, 천안을 정말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슴으로 일을 하지는 겁니다. 공무원에게도 ‘머리로 일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자. 그래야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가슴으로 일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매월 15일 시민과 대화의 날, 300인 원탁토론회, SNS를 통한 다양한 소통, 기업체 현장방문, 찾아가는 민원실 등 시민을 마음으로 섬기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성장하는 도시

김 민선6기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 그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 같은 응원이 더해져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 중 3가지를 뽑는다면,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지난 12월에 드디어 착공하게 됐습니다.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가운데 최초로 착수되는, 민간 참여 사업이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되는 제1호 사업입니다. 2020년에 완공하게 되면, 그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충남콘텐츠클리아랩 등 각종 문화콘텐츠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그동안 소외됐던 원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했습니다. 천연원료재배, 제조, 판매, 홍보, 체험,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산업과 관광이 융·복합된 친환경 K-뷰티 파크로 조성하게 됩니다. 공장을 본격 가동시 생산유발효과 1조 원 이상, 고용 유발효과 6,600여 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대동맥이 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했고, 사전타당성조사용역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충남·충북·경북 등 12개 시·군(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연장 330km, 3조 7,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특히 서해안 신산업 벨트와 동해안 관광

벨트 연결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부권 12개 시군의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창출, 교통물류의 핵심 축 역할을 담당하고 낙후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해소하는 꿈의 노선이 될 전망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노력

김 인구 64만 천안시 살림살이가 매우 복잡다기 한데 주요 현안과제는 어떤 것인지요?

구 천안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계층을 배려해야 합니다.

천안삼거리리는 천안의 대표 콘텐츠 중 하나인데, 천안삼거리 고유의 특수성을 재해석해 공원에 녹여내고 이를 토대로 시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는 천안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을 합니다. 전통적 정서와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천안의 랜드마크 기능을 하며,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로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방채무 ZERO화를 추진해 9월 말 채무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선투자확대를 가져오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상환부담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미래세대의 향유 가치를 동의 없이 차입하는 악순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민선6기 출범 당시 채무액은 1,695억 원으로, 시는 3여년간 재정운용 효율화, 경비 등의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 등을 통해 일반회계 채무액을 상환하고 산업단지 분양 수입금으로 특별회계 채무도 조기상환해 마침내 채무 제로 도시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입니다. 천안시는 서민 임대주택을 총 9,642세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대표 공약사업인 ‘임대주택 보급사업’이 당초 계획 2,500세대보다 약 4배 가량 많은 9,642세대가 공급되거나 확정

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천안시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보급 사업은 행복주택·공공임대아파트 2930세대, 전세·매입임대주택 1443세대, 민간임대아파트 1653세대, 뉴스테이 임대아파트 3266세대 등입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2018년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서북구 입장면과 동남구 동면에 350세대가 추가돼 상대적으로 소외된 읍·면 지역의 저소득층 근로자들까지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신혼부부 등 세대 구성원별로 주택규모나 형태를 맞춤형으로 건설·공급하므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천안시의 비전

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 년이 넘었고, 문재인 새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여가 지나고 있

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신다면?

구 현재 우리시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선제적으로 시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제1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했습니다. 2017년 일자리 2만 명, 고용률 64% 달성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사업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제조 기업이 주를 이루는 천안시에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기존 중소·중견기업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R&D 융복합 지구 조성사업과 미래기술 융합센터를 천안에 유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IOT, 빅데이터, 3D프린팅, 로봇산업 등을 육성해나갈 예정입니다.



김 목민관클럽 회원단체 장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구 민선6기 비전인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온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목민관클럽 회원단체장 여러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지방분권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해 국가 균형 발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을 넘어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행정은 시민의 삶에 대해 작지만 세심한 배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도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을 마음으로 섬기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시정의 핵심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민관클럽 민선6기 제20차 정기포럼
/전북 정읍시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글 송정복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wolstar@makehope.org
사진 정읍시청 제공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이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라는 주제로, 2017년 5월 25~26일 이틀간 전북 정읍시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20여 년의 지방자치를 평가해 보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역사의 증인, 말목장터 감나무

포럼에 앞서 참가자들은 근현대사의 운명을 가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던 전봉준 장군이 성장한 곳이자, 고부관아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 동학농민혁명군이 집결하여 첫 승리를 거둔 곳이다.

동학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나아가 전주성을 점령한 뒤 정부로부터 폐정개혁의 시행을 약속받는 전주화약을 맺는다. 그러나 정부가 폐정개혁을 미루자 농민군은 직접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는데, 집강소는 민중의 억울한 일을 해소하는 형태에서 각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강화된다.

당시, 전남지역은 53개 모든 고을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는데, 집강소를 운영하면서 농민군의 자치의식도 높아졌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들어서니, 커다란 감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123년 전 농민군이 집결하고 전봉준 장군이 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곳에 서 있던 나무라 한다. 역사의 증인인 셈이다. 2003년 태풍 ‘매미’에 쓰러져 비록 고사목이 되었지만, 곳곳한 모습을 바라보니 당시 농민군의 드높았던 외침과 얼마 전 광화문을 휩쓸었던 1,700만 촛불시민의 함성이 겹쳐진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 된다’고 했던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실패한 혁명을 완수하고 지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준비한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새 정부에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촉구한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부활한 지방자치, 20여 년이 흘렀지만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을 제외하면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행정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고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입법, 행정, 인사, 조직권 등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개편이 필요하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김두관 의원을 초청하여 새 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공약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지방분권 · 자치분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김두관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를 포함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약속하셨다. 저는 이게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부 장관으로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당시 고건 총리나 차관, 기초실장은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한 달 후 결국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선 당시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에 서명하셨다. 최근 발표한 대통령 비서실 개편안에도 정부수석 아래 자치분권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정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국회의 역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 계신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요구해주셔야 한다.”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라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석진 청장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2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69.6%였는데, 2015년은 45.1%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진다. 재정 상황으로는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 2 구조지만,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액은 4대 6구조이다.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은 재정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방소비세 증액,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법인세의 공동세화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최소 6대 4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비율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2%로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최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제공돼야 하는 국민 최소수준 복지사업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4대

기초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을 갖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 청장은 개별적인 개선사항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을 갖자’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논의에 앞서, 중앙을 전제로 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단체자치가 아닌 주민자치 확대에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정부가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 단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기초와 광역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제도권역을 일원화하여, ‘지역정부’로 가능하게 만들고, 그 지역정부 아래 동네 단위의 주민자치를 두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 시민참여가 절실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형 개헌방안은 오랫동안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고, 그 내



용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겨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이 6,595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3,200여 개라고 한다. 개별 법률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200여 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 거부감이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면 헌법을 그것에 맞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이 심어놓은 헌법 개정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국민에게 퍼져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인데, 중앙권력 중심의 현재 구조로는 지방분권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국민관클럽 등 지방자치 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

요하다. 새 정부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국민발의권이 없는데,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국민발안, 발의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전쟁이다

김성호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간사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당연히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른다. 하지만 재정과 권한을 나눠야 하는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제가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데, 자료집에 첨부된 내용을 제시하니 국회의원 다수가 반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이다. 장관이나 총리가 버티면,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렵다. 대통령 재가를 얻어도 부처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현하기 힘들다. 절실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낙선하겠구나’라는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난 촛불 민심과 같은 일이라 각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지방분권 개헌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포럼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며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중앙관료와 국회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믿음이 필요하다. 123년 전 세상을 개혁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실함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작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였다. 국민관클럽이 더욱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이유다.

목민관클럽 민선6기 제21차 정기포럼
2017년 중미연수 후기

나의 쿠바 코스타리카 연수기

글 이한섭 서울 노원구 일자리경제과장

068



출발 전부터 토론토까지 비행시간이 길어 걱정이었다. 다행히 복도 쪽이라 안심이다. 가는 동안 쿠바와 코스타리카 관련 책과 사전모임에서 나누어준 자료를 공부했다. 저 멀리서 열공하고 있는 권기태 부소장이 보였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있구나! 토론토에서 쿠바행 비행기로 갈아타고 다시 몇 시간을 가니 아바나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나왔다. 드디어 쿠바에 왔다.

아침에 일어나 숙소에서 아바나의 일출을 보았다. 장관이다. 드넓게 펼쳐진 땅 그 위로 솟는 태양은 장관이었다. 숙소에서 바라본 도로에는 차가 별로 없다. 한적하다. 몇 시간 숙소 주변을 둘러보았다. 1960년대 영화에서나 볼직한 차양들이 툭툭거리고 잘도 달린다. 그중 티코도 보인다. 열대의 나라답게 나무마다 꽃과 과일이 가득하다. 부러운 시선으로 가로수를 바라본다. 이름도 모르는 다양한 꽃나무들, 과일나무들, 야자수, 선인장, 수백 년 뒹직한 뿌리를 아래로 뻗은 나무들. 내 눈이 너무 부러워 시샘한다.

첫 날부터 일정이 빡빡하다. 가이드 펠리페는 북한의 김일성종합대에서 공부한 쿠바인이다. 쿠바의 역사를 꿰고 있는 그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

을수록 고개를 고덕이게 했다. '북한의 현재, 쿠바의 역사와 문제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단점'들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첫 번째 방문은 도시농업 벤치마킹이다. 우리 구에서 관심 있는 주제여서 주의 깊게 듣고 배웠다. 오가노포니코, 집약텃밭, 알라마르 협동조합을 차례로 찾았다. 참고로 노원구는 마을공동체 다섯 번째 걸음인 '녹색이 미래다'의 세부사업으로 도시농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사탕수수과 담배 수출이 주 수입원이던 쿠바는 주 수입국 소련이 해체·붕괴되면서 자생력을 잃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경제봉쇄로 인해 1990년부터 4년간 경제위기를 겪었다. 그러자 전 국민들이 살기 위해 도시농업을 시작했다. 외화가 없어 석유, 화학비료, 살충제를 살 수 없어 자연스럽게 유기농 살충제 지렁이와 미생물을 이용한 퇴비, 익충 사용 등 친환경 유기농으로 전환하였다.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나? 쿠바의 농업현장을 보니 노원구에도 이들의 '지렁이 농법', '친환경 유기농살충제 제조', '익충 사육'을 도입하고 실현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3일째 아침, 생태관광 선진국 코스

타리카를 가기 위해 쿠바 출국심사를 마쳤다. 그런데 비행기 타러 가는 약 2분 거리의 공항버스 안에서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넘게 차에 갇혔다. 무엇 때문에 멈춰있는지 안내도 없고, 양해도 없다.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버스 안에서 이유도 모르고 1시간여를 기다리자니 불쾌지수가 순식간에 높아졌다. 그렇지 않아도 쿠바에 도착한 날, 호텔 엘리베이터에 30분 동안 갇혔던 사건, 객실 TV를 며칠 동안 안 고쳐준 사건, 여자화장실 문제 등이 겹쳐 행복했던 쿠바여행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쿠바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한 시간 여후 비행기 앞에 도착해서 보니 비행기 화장실 분노를 수거 중이었다. 60년대 장비로 분노를 수거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마치 우리나라에 온 듯 인터넷도 되고, 에어컨도 나오고 거리도 잘 정돈되어 있어 안심이 되었다. 그동안 인터넷이 되지 않아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친구, 가족에게 사진도 보내고 안부도 물었다.

코스타리카 도착 후 가장 먼저 1980년에 설립된 유엔평화대학을 방문했다. 말 그대로 '평화를 가지려면

069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듯 산속 굽이굽이 차를 몰아서 다시 작은 차로 갈아타며 찾아갔다. 군대를 없애고 영세중립국이 된 사연, 유엔평화대학이 코스타리카에 설립된 배경, 절감된 군비로 무상교육·무상의료 등을 시행한 사연 등을 들으며 한편으론 부럽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다. 특강에서 Manish Thapa교수는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곧 평화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평화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가난을 극복하는 것, 남수단은 물을 획득하는 것, 한국은 북핵을 해결하는 것이 평화라는 그의 말이 뇌리에 쏙혔다.

이어 방문한 CANAECO는 코스타리카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생태관광과 지속가능관광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NGO다. 이 단체는 기업과 주민들 중간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과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 특히 여행자가 비행, 선박,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상쇄프로그램인 VCC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적극 활용할 만하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프로그램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열대농업과 산림 등을 연구하는 열대농업연구센터인 CATIE를 방문했다. 월버 필립스 교수는 현재 연구 중인 카카오에 대한 연구를 브리핑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카카오 열매에 번지는 질병으로 카카오 농사를 망치게 되었다. 볼리비아는 카카로나무에 병이 들면 그 나무에 기대어 사는 한 가족이 굶주리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질병을 이기는 나무를 육종하기 위해 다양한 카카로나무 종자가 필수라고 한다. 비록 열성 유전자를 지닌 나무라도 그 유전자를 이용해 전 카카로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가진다는 것은 큰 자신임을 알았다. 어떤 유전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다 소중한 존재다. 즉 하나의 종자는 우주만큼 소중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꼬불꼬불 고갯길을 지나 치즈농가에 도착했다. 차가 들어가지 않아 10여분 걸어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투리알바의 한 유기농 치즈농가를 방문했다. 딸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풀과 친환경 사료만으로 소를 키우고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대로 치즈를 만든다. 방문객이 직접 우유도 짜고 치즈도 만들고 먹

어도 볼 수 있다. 6차 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코스다. 서울에서도 도시민박을 운영해보는 가정에서 도입해 시행해 보면 좋을 듯하다. 지금 한창 유행인 김치 담그기, 두부 만들기, 된장 담그기, 빈대떡 만들어 먹는 것이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체험관광이 바로 그것이다.

이어 코스타리카 생태관광의 중심 관광청(CT)을 방문했다. 이들의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은 사람과 자연에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고품격 관광정책이다. 관광객들이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며, 지역음식을 먹고, 지역상품을 구매하며, 그 나라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품격 있는 방식이다. 코스타리카는 관광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는 듯하다.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일환인 CST(Certification for Sustainable Tourism)제도는 관광산업내의 기업 및 기관 등을 분류하고 관광객, 사회경제환경, 관광인프라, 물리생물학 측면에서 평가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우리가 지향할 목표다. 평가 항목 중 제일 낮은 점수로 등급을 결정하는 특징은 여러 정책 중 압권이다. CST는 관광업체들이 인증을 받은 호텔과 관광객을 연계하

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해 지금은 세계적인 인증제도로 정착되었다. 이후 우리는 CST인증 중 최상인 5등급을 받은 'Finca Rosa Blanca Coffee Plantation'을 방문했다. 나무들 사이에서 자라는 커피나무는 우리가 아는 농사법이 아니었다. 이곳은 커피나무 하나만 집중적으로 재배되는 농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콩나무를 비롯한 50여 종류의 나무 그늘 아래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나무가 커피나무였다. 커피나무는 본질적으로 큰 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관목(작은나무)이다. 농장이 이루고 있는 숲은 모든 나무와 꽃과 풀들이

자라는 자연 그 자체였다. 그 커피나무에서 채취한 열매를 자연풍으로 말린 커피! 생각만 해도 커피에 자연이 들어 온 것 같다. 이러한 생태관광투어는 생태답사, 현지식사, 숙박, 커피상품 판매 등으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관광 상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열대우림공원인 '라파스 폭포정원'은 폭포 하나만으로도 보상이 되고 남는다. 자연생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억에 남는 나라 코스타리카를 뒤로하고 다시 쿠바로 돌아왔다. 여러 국가에서 대사를 지낸 Alzugaray 교

수를 모시고 미국과의 관계 회복 이후 쿠바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쿠바의 차세대는 누군지, 이중화폐는 통합할 건지, 대체에너지 정책은 어떠한지 등등. 그에 의하면 차세대 정치인은 미겔 디하스카날로 쿠바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으며 향후 그를 비롯한 50대 정치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고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라울 카스트로도 그 세대들에게 강하게 개혁을 어필하고 있다. 또한 이중화폐는 당분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든 개선해야 할 과제이며, 자본주의 요소들이 점차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는 특강을 마쳤다.





이어 쿠바의 의료와 교육정책을 알기 위해 Hermanos Amejrias병원과 방과후학교인 'All the Hands'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팀바 지역을 방문했다. 혁명이후 쿠바는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 국민이 의료혜택을 입는 혁명적인 조치를 도입했고, 인구 104명당 간호사 1명, 인구 151명당 의사 1명이라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All the Hands'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아이를 키운다'는 취지로 취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우리 노원구의 마을공동체 세 번째 걸음인 '마을이 학교다'와 유사한 사업이다. 차이가 있다면 쿠바는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노원구는 지자체가 중심이라는 점이다. 태평양

건너 똑같은 사업이 있다니 우리들을 흐뭇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농림부 열대농업기초조사연구소인 INIFAT을 방문했다. 이 연구소는 쿠바 도시농업에 사용되는 유기비료 생산기술과 종자를 지원한다. 친환경농법은 사람, 식물, 동물, 환경의 4가지 요소가 서로 어우러져 순환되는 농법을 지향한다. 열대지역이라 해충이 많아 유기농업을 시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렁이 퇴비, 미생물 비료, 천적 곤충, 친환경 바이오농약을 이용해 유기농업을 시행하고 있다. 님나무, 늘, 고추 등의 추출액을 이용해 바이오농약을 만들고, 윤작과 혼작도 이루어진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코스타리카의 이산화탄소 감소프로그램인 VCC프

로그램과 친환경생태관광 인증제도인 CST인증제도, 쿠바의 주치의제도 등을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정책방향으로 보았다. 또한 쿠바 도시농업 중 지렁이 농법, 미생물 비료, 바이오 농약은 벤치마킹할 정책이며, 치즈 농가와 커피 농장, 라파스 폭포공원 등 생태체험관광은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돌아와서 보니 그토록 좋은 연수를, 그때 조금 더 긴장하고 더 많은 것을 봤어야 했다는 후회가 생기기기도 한다. 이렇게 멋진 나라들을 연수케 해주신 우리 김성환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권기태 부소장과 정창기 팀장 그리고 조현진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목민관클럽 민선6기 제21차 정기포럼
2017년 중미연수 후기

쿠바 도시농업 현장을 가다

글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2010년 4월, 강동구는 국내 최초로 3,000㎡ 규모의 공공텃밭을 개장했다. 도시농업이 행정 영역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나는 도시농업의 메카로 소개되는 쿠바를 꼭 한 번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기회가 왔다. 도시농업과 생태관광이 목민관클럽 해외연수 주제로 정해진 것이다.

20시간 가까운 오랜 비행을 마치고 아바나에 도착했다. 호세마르티 공항을 나왔을 때 우리를 반겨준 것은 어둠이었다. 도시의 어둠이 아니라 그냥 칠흑 같은 어둠 말이다. 가로 등 하나 없고 도심에 들어서도 민가나 상점 같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외에는 온통 거대한 암흑이었다. ‘아, 미국의 경제붕쇄가 아직도 지속되는 사회주의 국가에 온 것이지, 과연 쿠바에 온 것이지.’ 하는 자각이 물밀 듯 밀려왔다. 이러한 첫 인상은 여행 내내 다양한 풍경들과 연결되어 쿠바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환기시켰고 ‘이중화폐 체제’로 국가경제를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상시적 비상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았다.

나의 머릿속에 있던 쿠바의 도시농업은 어쩌면 환상 같은 것이었다. 물론 쿠바의 도시농업이 왜 지금의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참으로 큰 차이가 있다. 마치 사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림으로만 보고 말로만 전해 듣다가 직접 사자와 대면했을 때의 느낌이라랄까, 쿠바의 도시농업은 그렇게 다가왔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쿠바는 소련의 원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1991년 소연방이 붕괴되었고, 국가 경제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던 사회주의 종주국을 상실한 쿠바는 ‘평화시의 특별기간’이라는 선포와 함께 전시 경제체제로 돌입했다. 쿠바판 ‘고난의 행군’이다. ‘요시다 타로’의 저서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에 따르면 1989년에 이미 무역 거래 수입이 8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1993년 4월에는 궤멸적인 허리케인마저 닥쳐 4만 호 이상의 주택과 녹지대 작물이 파괴되었다. 사람들은 이내 체중이 줄고 영양실조에 노출되었고 실명자가 속출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아사자는 없다고 하나 가히 혁명 후 최대의 위기였다.

쿠바의 도시농업은 이러한 위기 극복의 수단이었다. 1989년 목초지를 뺀 농경지의 60%가 사탕수수였고

나머지도 커피와 담배 등의 단작 농업이었다. 소련의 원조에 힘입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물 쓰듯’ 했고 생산물은 대부분 무역 거래를 통한 외화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별안간 소연방 붕괴와 미국의 경제 봉쇄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관행적인 환금 농업은 하루아침에 황폐화되었고 토지는 기아를 모면키 위한 절박한 삶터가 되었다. 이미 70%가 넘는 인구가 도시로 이주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빈 땅은 그것이 시멘트로 덮여져 있거나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농토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쿠바의 오르가노포니코(Organopónico)는 그렇게 태어났다.

오르가노포니코(Organopónico), 쿠바 도시농업을 상징하는 말이다. 포니코(ponico)라는 말이 영어로 장소를 뜻하는 place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유기농 농장’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생산물을 판매하고 학교 등 인근 수요처에 공급한다. 엄밀히 말해 우리말과 상응하는 말은 없다. 쿠바 언어는 스페인어지만 오르가노포니코는 쿠바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다. “도시농업은 유기농업이다”는 명제를 낳은 말이기도 하다. 6월 7

일 쿠바의 열대농업기초조사연구소(INIFAT) 방문 때 호르헤 루이스 교수가 연수단을 향해 도시농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도시민들이 자급을 위해 농사를 짓는 것이므로 친환경, 유기농 농업”이라고 간단하게 말했는데, 이에 대해 “그렇다면 우리와 개념적으로 같다”고 대답한 것만 봐도 오르가노포니코는 도시농업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체의 책무’에서 환경친화적 농업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말을 이제는 빼도 좋을 것이다.

오르가노포니코는 벽돌이나 시멘트를 사용하여 고랑을 올려지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스킨 같은 비로 인한 토지 유실을 방지하고 연로한 경작자가 편하게 앉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었다. 도시에 서 농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 바닥도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바닥이 시멘트인 경우도 있고 노지인 경우도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경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계를 사용해 넓은 경작지를 가는 것은 단작 농사에 유리하다. 기계가 땅을 뒤집어엮으면 그것으로 지질이 변한다. 비료를 반드시

해야 하고 때맞춰 농약을 써야 한다. 화학요법이 유리하고 관행농법의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벽돌이나 시멘트로 각을 쳐 놓으면 기계 경운이 불가능하다. 분변, 거름 같은 유기질을 쓰기가 좋고 다양한 작물을 키울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농사법을 익힐 수 있다.

사실, 강동을 비롯한 서울의 도시텃밭은 오르가노포니코와 흡사하다. 격자형으로 고랑을 올려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작은 규모의 텃밭을 분양 받아 농사에 참여한다. 또한 다양한 작물을 심고 키운다. 좀 더 뚜렷한 차이점은 단작은 아니지만 대부분 단년작이라는 것이다. 공공에서 분양을 하므로 대부분 1년을 단위에 토지의 위치도 해마다 바뀐다. 우수텃밭을 선정해



서 같은 위치의 토지를 다년작이 가능하게 분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단년작이다.

우리가 방문한 두 곳의 오르가노포니코는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한 전문 농업인이 기술 지도를 담당하고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자급을 위한 가정 텃밭이나 학교, 기관 등의 자급텃밭인 오토콘수모스(Autoconsumos)와는 달랐다. 요시다 타로에 따르면 이러한 다양한 도시텃밭은 “아바나에만 8천여 곳이 있고 3만여 명이 경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목초지를 제외하더라도 15,000ha에 달한다”고 한다. 아바나의 전체 면적은 서울 보다 12,000ha가 더 큰 72,800ha이다. 이 중 채소나 과일을 생산하는 경작지는 아바나 전체 면적의 20%에 달한다.

강동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텃밭인 상일동 공동체 텃밭은 9,000㎡로 1ha가 좀 안 된다. 아바나에만 이런 텃밭이 1만 6천 700개가 있는 셈이다. 아바나와 서울의 면적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를 25개 구, 500여 개 동으로 각각 나누면 1개 구에 668개, 1개 동에 34개의 축구장 1배 반 크기의 멋진 텃밭이 있는 셈이다. 좀 거짓말 같다. 과연 올바른 통계인지 의문이 갈 정도다.

하지만 관행 농업이 순식간에 황폐화되면서 전 국민이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면 한시바빠 생존을 위한 자급 농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경작지 확보는 생명선을 잇는 일이기엔 연중 수확 가능 일수가 240일에 달하고 30일 주기로 수확이 가능하다

면 도시농업이 완전히 뿌리를 내린 90년대 중반부터 쿠바가 식량난에서 벗어났다는 것 역시 이해할 만하다.

쿠바 국민들이 영양실조 상태를 면할 즈음 북한은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엄청난 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쿠바의 도시농업과 비교해보면 짐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북한의 경우, 국토의 80%가 산지이다. 경작지 자체가 넉넉하지 않다. 산은 의식주가 다 있는 생태적 보고(寶庫)라지만, 오랜 기간 땀과 부족으로 나무를 심지 못하고 베기만 했을 것이므로 대부분 담수 능력이 고갈된 민둥산이다.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 인근의 산은 더욱 험벗어 비만 오면 홍수를 유발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겨울에는 수확이 불가능하다.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떨어지고 오뉴월 보리가 여물 때까지 극심한 기근이 닥친다. 90년대 중반 북한에 닥친 반복적인 자연재해는 농업 생산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고 정부의 배급마저 끊어졌다면 아사자의 발생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쿠바에서는 기아를 모면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 의해 자급텃밭이

광범위하게 발달한 이후 협동조합 농장이 뿌리내렸다. 보다 전문적인 유기농 기술을 사용하고 계획적 생산과 판매를 통해 커뮤니티 내에도 시농업을 보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도 수행하는 협동조합형 농장은 현재에는 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 또한 오르가노포니코였다. 연수단은 아바나 중심지에서 10여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UBPC Organopónico Vivero Alamar'를 방문했다. '알라마르 지역 종묘 오르가노포니코 협동조합'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채소 생산 외에도 유실수 접붙이기, 관상식물, 약초식물 등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협동조합이다. 농학박사 출신인 조합 관리자의 설명에 따르면 1997년 공동설립자 5명이 800㎡ 정도의 토지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독일의 비영리조직인 'German Agro Action'과 쿠바 정부의 지원에 의해 급속도로 성장해 2002년에 3.5ha, 2005년에 11ha까지 토지를 확장했고 근무자도 급속도로 늘어 120여 명의 조합원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농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가능한가 하는 물음은 매우 중요하다. 각 부문에서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

에서는 특히 그렇다. 쿠바는 대규모 농지, 생산에 유리한 열대 기후, 축적된 생태학적 유기농 기술, 커뮤니티 내 원활한 판로, 협동조합식 운영 등으로 고용을 상당수 유지한다. 알라마르 협동조합만 봐도 알 수 있다. 조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평면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다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공공 예산으로 농지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주민들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소정의 비용만 내고 농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도시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없다. 도시농업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농업을 배경으로 많은 수의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공동체가 봄꽃처럼 피어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경작지 확보와 좀 더 높은 수익구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연수는 쿠바 도시농업만으로도 많은 통찰을 주었다. 그 외에도 쿠바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코스

타리카의 생태관광, 에너지 및 커피와 카카오 등의 열대 농업 등 짧은 기간에 많은 주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각 주제별 소감을 엮어도 책 한 권은 족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 전형적인 '희망제작소 목민관포럼 연수'였다. 사실, 희망제작소 연수는 썩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연수는 아니었다. 과거 연수들을 보면, 너무 많은 공부를 시켜서 부하가 많아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곤 했다. 설 틈도 제대로 안주고, 버스로 이동 중에도 강의를 계속되고, 좀 쉬는 시간이다 싶으면 교육용 비디오를 틀어주곤 했다. 좀 가혹한 연수였다. 그동안 참여 단체장들의 '애정 어린' 불평을 받아들였는지 이번 연수에는 쉬는 시간도 좀 있었던 것 같다. 다음에도 좀 여유 있는 연수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집宇 宙집

2017.
11.15. 水

2018.
03.25. 日

은평역사한옥박물관
★ 은평한옥마을

은평한옥마을사회협회
공공미술프로젝트
Eunpyeong Hanok Village
★ CHONG JEONG HWA
Public Art Project

Micro Cosmos



목민관클럽 민선6기 제22차 정기포럼
/대전 유성구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모색하다!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9월 21일 ~ 22일까지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열렸다. 대전 유성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연구력이 가장 집적된 곳이다. 1973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국가연구단지를 목표로 조성된 대덕밸리가 위치한다. 이곳에서는 한국형 위성을 개발하여 발사하고 있으며, 통신, 미디어, 건축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최첨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공상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기술들을 현실화하면서 사람의 생활문화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비롯한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 또는 자연력에 의한 생산이 기계로 전환된 산업혁명과 같아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진다. 4차 산업혁명은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는데, 빅데이터 기반 행정은 주민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목민관클럽에서는 행정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분야의 거버넌스인 리빙랩 사례를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는 이그나이트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전시장은 특별손님으로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미래 행정이다

이광형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끝이 500년 전 인쇄술이 나타난 이래 계속된 정보의 독점체제가 인터넷과 컴퓨터가 세상에 나오면서 정보독점이 어려운 초연결시대가 되었고 이것이 기반이 되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교수는 ‘자라’와 ‘유니클로’ 두 의류회사를 사례로 설명을 이어갔다. 두 회사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생산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재고율을 현저히 낮추었는데, 이는 곧 실적에 반영되었다. 이를 행정에 대입하면 단순한 업무는 시가 대체하게 될 것이며, 복합적인 정신노동에 의한 의사

결정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주민의 요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현실적 모습이고 인간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혁신 X 리빙랩

정미나 전 서울사회혁신센터
리빙랩 디렉터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려면 시민의 삶과 괴리된 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결합되어야 한다.” 사회혁신과 리빙랩은 그렇게 만났다. 정 전 디렉터는 ‘2017 사회혁신 X 리빙랩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소개하면서 먼저 개념을 소개했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과정’이다. 아울러 리빙랩의 핵심적 기능은 ‘사용자의 능동적 개

입’, ‘실제 생활 세계에서의 셋팅’,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 ‘공동 창조’ 등이다.” 정 디렉터는 사회혁신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론이 맞닿아 있고,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행정, 과학기술을 품다

이광형 교수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이해와 함께 정미나 디렉터의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의 만남인 사회혁신에 대한 소개에 이어, 목민관클럽 회원 단체장들의 선도적인 실험과 도전 사례들이 이어졌다.

●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테스트베드는 신기술의 시험무대로



써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평구에는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과의 연계가 없었다. 이는 은평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학이나 연구시설이 위치한 타 지역에서도 공통된 고민거리이다. 그래서 은평구는 먼저 개발자들의 욕구를 살폈다. 기술연구 개발자들은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어렵게 개발한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적용할 기회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은평구의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기술 도입이 필요했다. 이에 지역 연구시설과 MOU를 체결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하수구 악취저감 및 빗물이용, 생태, 에너지 등에서 테스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광주 광산구는 빅데이터 활용 선도 도시이다. 과학기술의 혁신성은 자치분권시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 구는 민선5기 때부터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고민했다. 그 결과 행정에서 직관적으로 이뤄지던 의사결정 과정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바꿔놓았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옐로우 카펫을 설치하려고 신청을 받았더니 무려 33곳이 신청했다. 한정된 예산으로는 모두 지원해줄 수 없어서 유소년 인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초등학교 위치 등을 분석하여 설치 지점을 정하였다. 또한 범죄발생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CCTV설치하기도 하였다.

광산구 과학행정이 성공한 배경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성, 지속적인 행정확산 노력이 뒤따랐다. 우리 구는 이러한 성과로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연간 전국 50여 지자체 및 기관이 벤치마킹 방문하는 곳이 되었다.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IoT를 활용한 스마트 가로휴지통 관제시스템 구축과 활용사례를 발표하겠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연희로 및 연세로 등 인근 지역에 가로휴지통에 감지센서를 장착하고 휴지통의 상태를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청소가 필요한 휴지통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관리되고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였는데, 서울시 북촌 IoT 서비스 실증사업 참여업체와 공동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객관화된 통계자료에 의하여 쓰레기의 수거계획을 수립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하여 지역별 쓰레기 발생량 및

1일 권장 적정 수거횟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적재량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휴지통을 이전 설치하는 등 재배치를 통하여 한정된 행정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우리 구는 “2016 전자정부 대상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서울시내 타 자치구로 사례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향후 관내 공원, 등산로 등 인적이 드문 장소로 설치를 확대하고 스마트 둘레길을 비롯한 긴급통행로 IoT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대문구는 국민관클럽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선행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확산에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 서울 성북구(이현웅 팀장)

‘성북형 스마트 도시’는 혁신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행정, 교통, 복

지, 환경, 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하고 융복합하는 도시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기술적 편리성을 넘어 주민 행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북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보건·복지·문화관광·교통·환경·도시관리·안전·산업경제·행정 등 10개 분야의 정책과 통계, 연구, 마을, 데이터로 구성된 마을지도를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한다. 바로가기를 통해 주민 편의성·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변동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실시간 시각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북구는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을 모바일 및 GIS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연계·통합·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 경기 안산시(김정삼 팀장)

안산시는 74만여 명의 노동자와 6만 4천여 개의 공장과 4개의 국가산

업단지, 38개의 일반산업단지를 보유한 수도권 서해안 제조업 벨트의 중심도시이다. 안산시의 잠재력인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한양대학교를 활용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술혁신과 네트워크 및 융복합 지원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고 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신안산선이 연장되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지정하고 ASV의 서해 수도권 연구거점을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동 89블럭에 탄소제로도시, 적응력 있는 유연한 도시, 스마트한 시민, 자연 생태계와 연결된 도시를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사동 90블럭은 스마트 팩토리를 조성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지속되어 왔다. 바로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한다는 위기의식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안산은



다른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 후 안
산스마트허브 내 7천개의 신규일자
리가 만들어진다. 다만 변화된 일자
리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역량을 발
휘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
의 구축이 필요하다.

종합 토론

●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및 의미와 사람
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미나 전 디렉터의 주제는
혁신적이라 추가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광
산 및 서대문 사례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
사례로 목민관 지방정부에는 염가로 함께 공유했
으면 좋겠다.

●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이광형 교수는 인간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이 되어
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다. 목민관클럽에서
유념해야할 지점이라고 본다. 정미나 전 디렉터의
발표는 혁신의 의미가 와닿는다. 광산과 서대문의
사례를 보면서 드는 걱정하나 과학기술의 발달
이 일자리를 줄이지 않을까 싶다. 효율성은 떨어
질 수 있지만 사회적 기업처럼 좋은 일자리를 위
한 사업도 있다. 아울러 정보의 양극화,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우려가 된다. 4차 산업혁명은 분명 새로운 도
전이고 기회이지만 한편 위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다. 우려지점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협
력이 필요하다.

●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

역시 목민관 정기포럼에 오기를 잘했다. 정읍은 중
소도시로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증가
하는데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수도권과 달리 아동
친화도시를 이제야 준비하고 있다. 그래도 정읍시
는 KTX와 SRT가 정착하는 등 접근성이 좋아져 전
망은 있다. 노인복지 문제와 장애인 문제가 큰데
많은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법도 찾고 싶다.

●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4차 산업혁명과 행정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를 나눈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혁신과 발전을 진
지하게 고민하는 단체장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
다. 무엇보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소외시키거나,
정보격차에 따른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는 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면을 살
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기술의 진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술의 진보에 따른 인간의
편리함의 증대이고, 다른 하나는 '알파고'와 같이
인간의 능력을 한참 넘어선 새로운 '강력한 존재'의
등장이다. 이러한 양면성을 잘 살피서 과학기술의
진보가 막연한 우려가 아닌 인간의 행복을 증대시
키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관광도시 속초





민관협력 재난관리의 필요성

글 이다현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원인 및 성격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등으로 분류한다. 한국사회에 익숙한 재난은 주로 가뭄, 태풍, 집중호우, 폭설, 산불과 같은 자연재난이지만, 최근 들어 지진과 미세먼지, 조류독감,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재난의 피해가 일상생활 깊숙이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비판이 쏟아졌고, 이를 계기로 정부는 종합적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등 중앙정부 중심의 대응구조를 체계화하는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과연 정부 단독으로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한가. 오늘날의 재난은 그 시점과 형태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 안전안심 지역만들기를 주제로 일본 연수를 다녀왔다. 지난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를 들여다보고 시사점을 찾아본다.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방안

일본은 1961년에 제정된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방재회의를 설치하고 있으며 각 방재회

의는 지역 방재의 기본 방침과 계획,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토시 방재회의의 사무국을 담당하는 ‘교토시 방재위기관리실’은 지역방재의 사령탑으로서 매년 지질학적, 기상학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까지 반영한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사전예방과 더불어 재해 관련 정보 수집 및 배포, 주민의 자주방재조직 지원 등을 통해 재난 피해를 경감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토시 방재위기관리실의 역할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재해정보이다. 방재위기관리실은 지진, 수해, 산사태의 지역별 위험 정도를 ‘방재지도(Hazard Map)’에 표시하여 배포하는데, 이 지도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권의 재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지질학적, 기상학적 변화 발생 시 곧바로 반영하여 재배포 되는 방재지도는 부동산 거래 시에도 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해 경감에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 정확한 정보의 구축과 공유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민을 방재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대가 현장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이 현장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교토시는 주민 자주방재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기자재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주방재조직이 지역사회의 자주방재계획을 스스로 세우도록 독려하는데, 여기에는 재난 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매뉴얼 작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재난 시 주민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인해 행정기관이 피해를 입으면서 행정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가 마비되었다. 그리고 도로 파손 등으로 행정의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스스로와 이웃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토시의 피난소 운영대책에는 주민들의 주체적 역할이 잘 드러난다. 교토시는 재난 시 피난소를 ‘광역 피난소’와 ‘동네피난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중 동네피난소는 주민들의 생활권인 학교 체육관, 집회장 등에 설치되는데, 교토시는 동네피난소가 주민자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네피난소 운영 매뉴얼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여기에는 주민 각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배정되어 있다. 또한 피난소 내부의 배치도도 미리 확정하고 있는데, 거주공간과 통로, 게시판과 탈의실의 위치까지 정해져있다. 배치도에는 피난 약자를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등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작성하고 있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피난 약자’를 매우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약자와 장애인, 아이, 부상자는 물론이거니와 공동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여성, 외국인, 안경이나 의치가 없는 주민,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주민들까지도 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생활보호를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피난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이것은 서로 배려함으로써 피난소 생활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주민들의 생존율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관협력을 통한 재해복구

일본은 재난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재해 복구를 돕는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에는 전국에서 무려 137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다. 이에 재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상하면서 이들이 재해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바로 ‘재해볼란티어센터’이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재해볼란티어센터에 참여 접수를 한다. 전국의 각 센터는 재해지의 볼란티어센터와 조정하여 자원봉사자를 필요한 만큼 매칭한다. 일본 전역에 위치한 187개의 재해볼란티어센터는 재해지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설조직인 교토시 재해볼란티어센터는 행정(교토시), 비영리단체(교토시 사회복지협의회), 중간지원조

직(NPO지원센터) 등 3개의 주체가 서로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교토시 재해볼란티어센터는 각 구(區)에 재해볼란티어센터가 설치되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각 구(區)에서 발생한 피해와 자원봉사자 수요를 파악하여 타 재해볼란티어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하고, 파견된 자원봉사자를 각 구(區)에 매칭 한다. 또한 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타 센터에 요청하여 제공하는 등 재해복구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전국의 재해볼란티어센터들은 서로 물자를 순회하여 사용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재해볼란티어센터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아니라 재해지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市) 단위 재해볼란티어센터와 구(區) 단위 재해볼란티어센터는 각자 명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실제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를 통한 재해복구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2016년에는 ‘광역재해볼란티어조정기관’을 신설하여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 단체들까지 포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제언

재난 대응은 법으로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다. 정부는 안전총괄 부서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등 중앙 차원에서의 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렇다 할 구조가 확립되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민간과의 협력 체계도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기계적인 민관협력은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의 협력적 재난관리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효과적인 방재를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탄탄한 구조 확립과 동시에 민간과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시민들 또한 방재의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은 언제든 닥쳐올 수 있으며, 누구라도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난의 최전선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시민이다. 이에 시민은 스스로를 방재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행정은 더 많은 주민 주체를 발굴함으로써 행정과 시민 간의 협력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복, 시민의 목소리로 볼륨을 높여라

글 오지은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부탄을 방문하고 페이스북에 남긴 이 글은 부탄 법전에 나오는 글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께 익숙한 행복한 나라 부탄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은 ‘행복’이 개인이 추구하던 가치에서 국가(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지방정부에서 먼저 빠르게 인식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행복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서울 종로구와 함께 2015년 ‘상상테이블-행복한 종로구 미래그리기’, 2017년 ‘행복드림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행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 사례를 바탕으로 행복을 접근하는 방법들을 돌아보고자 한다.

주민이 만들고 발의한 ‘행복조례’

서울 종로구는 2015년 3월부터 시작한 행복드림프로젝트는 행정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기존 방식이 아닌, 정책방향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프로젝트이다. 공무원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행복’을 학습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갈지 3~4개월간의 공부를 마친 이들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을 기획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과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을 모아 ‘행복드림이끄미’라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종로구

행복정책의 방향을 잡고 활동계획을 세웠다. 행복에 대한 상을 나누고, 행복한 종로구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그려보기도 했다. 여러 활동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행복조례’ 제정이다. 종로구의 행복정책을 큰 비전 안에서 체계적으로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했다. 행복드림이끄미들은 조례 제정을 위한 분과를 구성했고, 조례를 직접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하며, 조항 하나하나를 직접 만들었다. 이렇게 완성된 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 안타깝게도 구의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은 더욱 결속하면서 구의회와 행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주민들은 행복조례의 대표적인 내용이었던 행복지표개발, 행복증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와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사업들을 제안했는데,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올해 실행될 예정이다.

행복에 대한 인식 확산, 「행복드림아카데미」

행복드림아카데미는 주민들이 종로구의 행복정책을 가장 먼저 접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에 중요하다. 그 운영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감하라 : 불만 들어내기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한 질문은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였다. 놀랍게도 참석자 중에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딱 한명이었다. 대다수가 보통 또는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자발적으로 참석한 주민들의 특징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행복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잘 알고 싶어서, 지



금보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온 경우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배우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개인의 행복을 넘어 종로구 지역공동체에 대한 행복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우선 드러나지 않은 불만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에 대한 불만을 꼬집어내어 불만지도로 만들어보았다.

불만지도에는 노후된 골목길, 너무 많은 행사, 집회, 시끄러운 환경, 너무 많은 외부인 등이 언급됐다. 종로구는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시설개선이 쉽지 않고, 청와대와 광화문을 포함하고 있어 외부인들의 왕래가 잦다. 이들이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행복하지 않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둘째, 작은 실천부터 함께하기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종로구에 대한 불만을 함께 나눈 주민들은 같은 지역의 주민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문제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처음 만난 주민들끼리 서로가 느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각 조에 가벼운 만남을 제안했다. 모두가 함께 시간을 정하고 동네에서 만나 차를 마시든, 동네를 둘러보든 무언가를 해보는 것이다. 이 같은 만남은 커피 한잔, 밥 한 끼이지만 동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혜화동 마로니에에서 만났는데, 마로니에에 중국유학생이 많아 이를 고민하고 싶어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 혜화역까지 도보로 걸으며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는 정보를 나누었다. 저는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

“건강한 행복을 찾는 날 아침 8시부터 세검정1교에 모여서 꽃을 심었다. 현재 꽃이 어마어마하게 심겨져 있다. 우리가 먼저 꽃을 심고 점심 먹으로 간 후 다음 팀이 물 주러 왔는데, 가까운 집에서 수돗물을 얻으려고 했더니 아무도 물을 안주더라.”

“제가 부암동 주민자치위원이다. 예전에 구청에서 화단을 만들었는데 꽃만 심고 갔다. 거기가 주민들이 있던 곳과 가깝지 않은데, 접근이 쉽지 않다.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주변에 이야기해서 물을 잘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불만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기

동네를 함께 둘러본 주민들은 각자가 동네에서 경험했던 행복을 나누는 행복지도를 만들어보았다. ‘어르신들과 행복 돛자리 음악회’, ‘행복장터’, ‘한옥 골목길’, ‘어머니합창단’, ‘효자동 재래시장’, ‘봉사자들의 동네케어’, ‘꿈의 공원(낙산, 와룡, 삼청공원)’, ‘인왕산 소리연습’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한 활동까지 동네를 중심으로 행복한 순간들이 공유되었다.

이후 주민들은 현재 느끼고 있는 불만을 줄일 것인지, 경험한 행복을 늘릴 것인지 논의해 함께 행복을 실천해보는 계획을 세웠다.



행복을 정책으로, 주민이 직접 행복지표 만들기

종로구는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부결되었지만, 구청장 발의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를 재상정해 9월 1일 제정하였다. 아울러 주민들은 앞서 살펴본 활동들을 바탕으로 조례에 담았던 ‘행복지표 개발 연구’를 시작하였다. 행복지표는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도를 측정하고 수치화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이다.

한발 한발 주민과 함께 행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 사례에서 발견된 다음의 함의들을 참조해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행복지표가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길 바란다.

1.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시민주체가 필요하다. 자발적인 주민들을 모아 행동그룹을 구성하자.
2. 주민들의 참여를 지원해 줄 전담행정이 필요하다.
3. 기존의 참여정책과 연계해 ‘시민참여플랫폼’으로서 기능하게 하라.

주민들이 참여해 만드는 ‘행복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여러 장점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기존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주민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 주민참여정책으로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으며, 생활의 질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정책들이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미쳤을까? 주민들이 참여해 현재 사는 지역에서 삶의 만족도를 행복지표로 만들어 낸다면, 각 제도들의 주관적 평가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사업으로 제안, 실행할 수 있는 기본 정보까지 지표들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행복지표를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에 참여할 동기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참여플랫폼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은 행복할 준비가 되어있다

많은 연구를 통해 돈이나 학력, 직업 등 객관적 조건보다 사회적 경험이나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험이나 관계는 조직이 아닌 개개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종로구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지방정부와 국가가 나서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시대이다. 한 국민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차이를 느낄 수 없는 막연한 행복이 아닌, 삶 속의 변화로 행복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길 바라본다.



인구 과소화에 대응한 농촌 마을의 경제 활력 제고 방안

일본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사례를 중심으로

글 김현수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들어가며

지난 6월 전국 지자체의 인구감소 추이를 예측한 행정안전부의 발표는 큰 충격을 주었다. 핵심은 30년 이내 전체 3,482개 읍·면·동 중 40%에 육박하는 1,383곳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는 것이었다. 소멸위험의 대표적 징후가 바로 인구 과소화¹⁾로, 지역 농어촌만큼 이를 체감하는 곳은 없다. 따라서 인구 과소화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농어촌 마을의 활력, 그중에서도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올 초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발전정책 중 경제 활력 증진 방안으로 ‘투자유치촉진’, ‘기존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 마케팅’ 등 3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²⁾ 이는 ‘마을 고유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비즈니스(CB) 활성화’와 직결된다.

한국에 앞서 인구 과소화 문제를 겪고 이에 대응해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 일본 농촌마을의 CB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그 지역의 사회 시스템이 종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주민이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을 회피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토목용어사전).

2) 박진경 외(2017),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7-1, pp97-99. ‘투자유치촉진 전략’의 골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생업이 가능한 산업의 촉진. ‘기존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의 핵심은 지역 고유 자원의 상품화 및 산업화. ‘지역 마케팅 전략’은 지역 연고사업의 재가치화 및 적극적 외부 마케팅 강조.

일본 농촌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사례

(주)마이팜 ‘유휴농자를 체험 농장으로’

(주)마이팜은 도시민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게 농가에서 휴경지를 빌려 체험장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2007년 니시츠지 카즈마 대표가 ‘사람과 농업을 잇는 회사’란 모토로 지역 농장주들로부터 휴지를 빌려 체험농장을 운영한 게 시초다.

마이팜의 가장 큰 특징은 방문객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취미로 농사짓는 사람, 귀농·귀촌을 염두에 둔 사람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과정을 운영 중으로, 체험객은 연 4,000명에 달한다. 2012년엔 마이팜 농장과 농가의 농작물을 다루는 전문 유통 회사를 설립해 월 최대 2,000만 엔의 매출을 올렸다.

카미카초정 ‘나뭇잎을 사업 아이템으로’

도쿠시마현 카미카초정의 ‘츠마모노 비즈니스’는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상품화 및 부가가치를 창조한 대표 사례다. ‘츠마모노(妻物)’란 일본 음식점에서 요리를 장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뭇잎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작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파로 주요 작물인 감귤류 나무가 얼어 죽어 지역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지역 재기의 발판을 찾던 농협 소속 농업지도원 요코이시 토모지는 주민들이 산림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우연히 음식점에서 츠마모노를 보고 제3섹터 기업 (주)이로도리를 설립했다. 고유의 색과 맛을 가진 츠마모노에 자본금 1,000만 엔으로 시작한 회사는 년 2억 6,000만 엔의 수익을 거둬 정도로 성장했다. 또 도시로 나간 젊은이 중 귀향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인구도 2,200여 명으로 회복됐다.

미야마정 ‘마을의 가치를 높은 녹색 관광’

미야마정은 기존 마을 관광사업에 잘 보전된 자연 경관과 특산품의 가치가 더해지며 부가가치를 높인 ‘그린 투어리즘’의 대표 사례다. 전체의 96%가 산림인 미야마정은 목재 판매가 주요 수입원이었으나 1970년대 석유, 가스 등으로 연료가 바뀌고 외국의 저렴한 목재가 수입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했다.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유출에 맞서 미야마정은 일찌감치 고유의 환경과 가치를 잘 보존했고, 이 과정에서 마을 자원인 물과 경관, 초가지붕 등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설립해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유치 성과를 거뒀다.

그린 투어리즘의 상징인 가야부키 마을을 이야기 할 땐 지역을 옛 모습 그대로 지키려는 상징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도 빼놓을 수 없다. 조례는 가옥 안에서의 상행위를 금지하고 마을 내 유흥시설과 골프장 등을 짓지 못하게 한다.



시사점

자원의 재발견

마을에 자리한 자연적·인적·공간적 자원 등은 시대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가치가 달라졌다. 따라서 마을 자원 중 흔하거나,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저평가 되는 자원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한계 노동력’이라 불리는 노년층이다. 과거엔 노인들을 생산성이 낮은 존재로 여겼지만 첨단 산업이 중심인 지금은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에 이야기를 가진 노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외부 인적 자원 유치

마을의 기존 자원을 재발견 및 재평가하려면 남다른 시각과 경험, 생각을 가진 외부인의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원 간 연계, 혹은 외부의 수요와 적절하게 연결하는 능력은 외부인에게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다.

남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키맨(Key man)’이 아니더라도 관광전문가, 홍보 마케터, 문화예술인, 유통전문가 등 외부인의 유입은 산업 기반이 허약한 농촌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생태 자원에 대한 가치 공유

마을 자원을 재발견해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선 기존 자연자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그 가치를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 내 일부 개인이나 가구가 개발이익 또는 보상을 기대해 생태적 가치를 외면하고 훼손한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미야마정 주민들은 자원 보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십 년 간 마을 만들기를 해온 끝에 고유의

풍광을 유지했다. 생태자원 보존에 대한 이 같은 자부심과 공감대는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확립으로 이어진다.

나가며

농어촌의 인구 과소화, 그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는 오래된 주제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중앙과 지역 간 격차는 지역 공동체들이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게끔 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CB) 활성화는 농어촌 마을의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요소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소통과 협력, 경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이윤 역시 마을로 환원돼 경제공동체로서 결속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일본 농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가 주는 세 가지 시사점은 침체된 국내 농어촌 마을에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우리를 재발견하는 세대공감 프로젝트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99일의 여정

글 백희원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동료로 만나보는 시니어와 청년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고령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활동적인 시니어 상을 제시하고, 은퇴 이후의 삶의 방향을 제안하는 사업과 연구를 진행해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의 후원을 받고 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이하 '시.드.페')은 그 중 하나로 시니어가 직접 자신의 버킷 리스트에 있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실행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니어의 아이디어에 실행지원금 250만 원과 청년 Doer(실행자)와의 매칭이 이루어지며 1회부터 3회까지 18개의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 그중 <공감 영화제>(1회 선정), <장애인의 도시 텃밭>(2회 선정)같은 프로젝트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4회를 맞이한 올해 <시.드.페>는 처음부터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팀을 이루는 세대공감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최근 세대갈등이 이슈화 되며 청년과 시니어의 세대공감이 중요한 소셜 미션으로 떠오르기도 했고, 역대 <시.드.페> 참가자들이 프로젝트 실행 경험 못지않게 다른 세대와 함께 일한 경험의 가치를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청년 참가자들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통해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지나고 보니 사회생활을 하기 전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세대공감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니어 참가 역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훈련이 되고, 청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해의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에게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는 곧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세대차이는 재미다

세대공감 프로젝트로 거듭난 올해 <시.드.페>의 진행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선 “일상에서 겪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모집했다. 100여 명이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중 30개 아이디어를 ‘공익성’, ‘실행가능성’, ‘혁신성’을 기준으로 선별했다.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세대공감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자신을 소개하고, 시간 순으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뽑아보는 세대연대기 워크숍 시간에 참가자들은 서로의 생애에 대해 함께 이해했다. 베이비부머 세대 참가자가 세 번째 사업실패를 경험했을 때, 첫 직장에 입사한 엑스 세대 참가자의 이야기가 교차되고, 데이트 상대의 뽀빠를 기다리던 세대와 카톡으로 ‘썸’ 타는 세대의 연애 이야기가 나란히 만나며 서로의 ‘차이’에 대해 호감과 재미를 느끼는 낯선 장면이 펼쳐졌다. 아버지의 병환이나 구직 실패 등 개인적인 고난을 극복한 경험들은 세대를 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팀 빌딩을 거쳤고, 프로젝트 수립 워크숍에서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이후 10주 동안은 팀 별로 계획한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중간에 해체 위기에 놓인 팀



도 있었고, 중도 포기하는 참가자도 있었지만 6개 팀 모두 포기하지 않고 협업한 결과, 지난 9월 2일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 피아노의 숲에서 열린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결과 공유회 – 마주보다, 공감하다>에서 6개 프로젝트의 결실을 선보일 수 있었다.

시민이 창안한 세대가 만나는 6가지 방식

‘4men123’ 팀은 놀다보면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가족 소통 보드게임 ‘소통마블’을 개발했다. 주사위를 굴리며 소통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보드 앞에 어린이 참가자들이 줄을 섰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현장에서 많은 호응을 산 ‘귀여미’ 팀은 시니어와 청년 간 캘리그래피, 손편지, 영상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뭘해? 말해!’ 팀은 신조어와 구어를 퀴즈 형식으로 선보였다. 두 세대가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진행하고 기록한 ‘북적북적 책수다’ 팀은 현장에서 청년 팀원은 시니어에게, 시니어 팀원은 청년에게 상담을 해주고 책을 처방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구두 장인 박광한 시니어의 수제화 기술 전수를 위한 동영상 제작하고, 실제 고등학교 교실에서 강의를 진행한 ‘세장깨’ 팀은 교안과 구두를 선보였다. ‘청년탐사대’ 팀은 시니어가 인터뷰한 청년 창업자의 삶을 전시하고 제품을 선보이는 작은 마켓을 열었다.

참가팀의 결실로 채워진 마지막 축제 자리는 화창한 날 놀러 나온 가족들과 세대공감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세대공감, 축제에서 일상으로

“그냥 다 같이 잘 살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사회문제를 볼 때, 청년 혹은 시니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대 구분 없이 같이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드.페> 참가 동기에 대한 한 참가자의 답변처럼 세대공감은 서로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걷어내고 나이에 상관없이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충분한 일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이 간단한 만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처럼 없다. 집, 학교, 직장에서 만나는 관계는 상사와 부하, 스승

과 제자처럼 위계적이다. 이런 위계는 시니어에겐 도덕성을, 청년에겐 순응하는 역할을 요구하며 솔직한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

커리어가 유연해지고, 은퇴가 늦춰지는 저성장 시대의 고령사회는 곧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야 하는 다세대사회이기도 하다. 20대와 50대가 대학동기로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세대 간의 만남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다른 세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장의 형성이 필요하다. <시.드.페>는 사회혁신 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고령사회에 대비해 시도한 세대공감 축제지만 앞으로 세대공감은 일상이 되어야 한다.

이 일상은 아마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집, 학교, 직장을 벗어나 다른 세대와 수평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은 바로 도서관이나 스포츠 센터 같은 지역 시설이다.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반려동물 커뮤니티도 최근 새롭게 보이는 세대공감의 장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지자체의 미션은 은퇴자나 고령층 대상의 정책과 청년인구유입 정책뿐 아니라 이처럼 모두를 위한 지역 공공공간을 설계하고 그 역할을 넓혀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목민광장 12호를 읽고

글 김유선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주무관

목민광장은 지방행정에 대한 지식과 행정가의 열정, 지방자치의 우수하고 다양한 사례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유용한 책이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민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한편, 이 시대의 바른 정치와 올바른 행정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사실, 우리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들을 이행하고, 주어진 권리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기 어렵고, 모든 이해관계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어 가는 것 또한 무리이다. 행정을 담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할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는 항상 갈등이 생기고 찬반여론이 있으며, 정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와 불편을 겪게 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목민광장이 주는 교훈과 가치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 행정은 언제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소통을 중시해 나가야 한다. 간혹 시민과의 소통문제에 소홀해지거나 게을러질 때 목민광장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시민과 행정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목민광장을 읽다보면 타 지자체의 소통행정에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다양한 우수 정책들로 시민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사례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이다.

어느 정책이든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례들을 통해 배우고 있다. 사람보다는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사건들, 사람을 중시하지 않았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 그리고 물질만능주의가 빚어내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의 말씀과 함께 우리시에서도 사람의 도시를 향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타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다. 내게 남은 공직생활 동안 행정에서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목민의 이념을 통해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람과 소통, 그리고 지방분권과 참된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목민광장을 통해서 계속 접하고 싶다.

목민광장



목민광장 12호를 읽고

글 이은경 노원구 기획예산과 주무관

12번째 발행된 목민광장의 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올해는 87년 6월 항쟁으로 결실을 맺은 민주화체제 '87년 체제'를 맞은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화문 촛불집회의 결실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가 바뀐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의 급속한 사회변화, 그보다 더 놀랍고 변화무쌍했던 지난 1년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 표지였습니다.



목민광장이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다루고 있는 내용과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의 주제도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방자치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시의 적절하게 고민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노원에서 하고 있는 일, 하고자하는 일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다른 지역의 정책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목민광장이 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맞는 거죠.

19차 포럼의 주제이면서, 기획특집으로 실린 기억문화에 대한 내용이 마음속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포럼내용을 접하기 전에는 '기억문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용어부터도 생소했는데요.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모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사건들만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해 기억으로 남고, 사람들의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37년 전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바로 3년 전의 세월호 사건과 같이 말입니다.

19차 포럼에 직접 참가해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단원과 2학년 학생들의 유품을 보존한 4·16 기억교실을 돌아보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보루였듯이, 세월호의 기억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원천이 될 것이라는 정근식 교수님의 글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며칠 전 또다시 드러난 세월호 보고서 조작 기사가 함께 떠오르며 더 이상 세월호 사건에 조작, 은폐와 같은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세월호 사건을 일깨우며 기억문화로 만들어가는 일은, 무책임한 어른들로 인해 희생된 꽃 같은 아이들을 위한 일이면서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목민관클럽의 나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권의 목민광장이 발행되었습니다. 목민광장을 열심히 읽어볼 기회를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책을 받아들이고 읽어볼 때마다 우리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목민관클럽과 목민광장이 앞으로도 저와 같은 지방 공무원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낡은 창고, 청년을 품다 : 순천시 청춘창고

글 정환훈 희망제작소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106

순천역에서 약 500m, 한적한 길을 따라 걷다보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빛바랜 건물을 만날 수 있다. 조금은 흐려진 농협마크가 새겨진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외관에서 주는 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낡은 듯 현대적인 건물 내부는 젊은 감각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건물 1층은 다채로운 먹거리들이, 2층에는 아기자기한 수공예품들이 판매·전시되고 있다. 1961년부터 긴 세월을 농협의 양곡창고로 쓰이던 이 건물은 2015년 순천시가 임대해 리모델링을 거쳐 올해 2월 ‘청춘창고’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순천시가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원도심의 새로운 문화·관광거점으로 만들고자 기획한 것이다. 청춘을 품은 낡은 창고에서 시작되는 지역사회 혁신의 현장, 순천시 청춘창고에 다녀왔다.



107

청춘창고의 청년창업, 준비부터 자립까지

올해 9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9.2%로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1.5%로 동월 기준 가장 높았다. 이처럼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순천시 청춘창고도 지역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시작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만 19세~34세의 청년들을 선발한 후 6개월간 창업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창업이 1년 이내 폐업률이 37.6%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는 창업자들의 자생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청춘창고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가들은 2년간 영업할 수 있으며, 그동안 자생력을 키워 2년 후 외부로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순천시는 청춘창고 개장 이후에도 후속 교육으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회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내 최초 청년창업가 인큐베이팅 공간으로서 그들의 자립을 위해 꼼꼼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외에 우리나라 청년창업자들에게 창업의 현실적인 장애요소를 꼽으라면 아마 높은 건물 임대료를 꼽는 이가 많을 것이다. 최근 예비 청년창업자들에게 푸드트럭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도 건물 임대료 없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부담감은 모든 소상공인 창업자가 갖는 것이지만,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

순천시는 청년창고의 점포 임대료 부분에서도 청년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했다. 월 1만 원 수준에 연간 15만 원을 넘지 않는 점포 임대료로 청년창업가들은 단돈 30만 원으로 2년간의 영업을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청춘창고의 먹거리들은 비슷한 수준의 음식점보다 훨씬 저렴하다. 덕분에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과 내일로 여행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청년창고의 성공을 위해 모든 부분을 순천시가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청춘창고에 입점한 청년창업자들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발로 뛰지 않았다면 매월 2만여 명이 찾는 활기찬 청춘창고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입점한 청년들이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해온 것이 주효했다. 시민들에게 입소문을 내기 위해 푸드트럭을 끌고 나가 지역 행사에 좌판을 벌이며 시민들과 접촉했던 것들이 그렇다.

청춘창고,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순천시 청춘창고는 도시재생의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이다. 청춘창고는 청년창업가의 인큐베이퍼 아니라 쇠퇴하는 원도심 재생을 위한 복합 문화·관광의 거점의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나 지가상승, 신도심의 발달로 인해 원도심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순천시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은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겪으며 상권의 쇠퇴까지 이어졌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몇 년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원도심의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해 왔다. 하지만 도시재생 열풍의 초기에는 상당수 도시재생사업 방식이 지역의 특성과 맞지 않게 획일적이며, 도시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비판도 함께 불거져 나왔다. 기존의 재개발사업과 다를 바 없이 지역의 문화나 이미지와는 동떨어졌다는 이야기이다. 청춘창고는 두 가지 지점에서 이러한 비판을 넘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례로 발전하고 있다.

우선 55년이 넘은 양곡창고를 재해석한 것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해 도시의 기억을 단절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잘 활용한 점이다. 양곡창고와 같은 근현대의 역사를 간직한 자원들은 쉽사리 무시되곤 한다. 하지만 순천시는 도시의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 양곡창고의 외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청춘창고를 만들었다. 도시재생이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재해석과 재활용을 통한 도시정비라는 점에서 도시의 역사적 맥락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춘창고를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사례로 볼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그저 건물과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콘텐츠를 담아냈다는 점이다. 지역의 작은 미술관, 박물관 등이 콘텐츠의 부재로 찾는 사람이 없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런 사례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순천시는 청춘창고를 조성하고, '청년창업가 인큐베이팅'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문제, 관광객 유치, 문화공간 조성, 원도심의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곳은 1961년 건립되어 50여 년 넘게 정부의 양곡을 보관하던 창고로 22개 청년점포와 공연이 가능한 무대 및 작품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다.

이제 청춘창고는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창업공간이자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는 공간으로 채워질 것이다.’
— 청춘창고 기념사에서

순천 청춘창고는 올해 2월 개장해 아직 만 1년이 지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사례이자 청년창업가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순천시가 보여준 꼼꼼하고 세심한 관심이 지속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2017년 하반기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들이 소개하고 싶은 소식들을 담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에너지 절약계획서 무료검토 서비스

『(건축허가)+(에너지절약계획서 무료검토) = 주민만족행정』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무료검토제를 전면 시행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500㎡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5개의 외부기관 또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에서 검토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경우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외부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무료 검토에 따라 건축허가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서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면 대략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비용은 주거와 비주거 부분으로 나뉘 최대 25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강서구는 모든 건축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전담할 5명의 공무원을 지정해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무료검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쉽게 작성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민원인 스스로가 계획서를 작성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 10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202건의 건축허가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무료 검토하였는데,

약 7일간의 허가기간이 단축되었고 검토수수료 약 1억 5,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무료검토제 시행은 건축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국내 유일, 대놓고 B급 ‘고시촌 단편영화제’

서울 관악구, 올해로 3회째

대놓고 B급을 표방하는 영화제가 있다. 바로 ‘고시촌 단편영화제’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신림동 고시촌이 로스쿨 도입에 따른 사법고시 폐지로 공동화 위기에 처하자 고시촌을 지식문화 마을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고시촌 단편영화제’를 개최하였다.

구는 고시촌 일대의 빈방에 청년예술인들을 입주시키고 주거비를 지원하였다. 이렇게 지원한 결과 영화감독, 연극연출가, 시나리오 작가 등이 안정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었고, 고시촌을 예술인들로 가득 메움으로써 「대놓고 B급 영화제」의 계기가 되었다. 영화제는 지역의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전문 예술인들과 협업하고, “영화 관람은 영화관에서”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고시촌 카페, 서점, 소극장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영화관 없는 영화제’를 창조할 수 있었고 지역상권도 살리며 관객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놓고 B급 영화제」는 발칙하고 기발한 상상력이

면 영화제 공모가 가능하다. 2015년 제1회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를 주제로 131편이 출품되어 작은 규모로 출발하였다면, “너 괜찮아? Are you OK?”를 주제로 한 2016년 제2회의 경우 25배 늘어난 328편이 출품되고 시비 7천만 원을 지원받는 등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고시촌 단편영화제는 청년의 고통과 현실, 우리사회 비주류의 목소리를 담기위해 11월 25일~26일 양일간 ‘Do You Hear Me?(내 말 들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출품 대상은 상영시간 30분 이내의 창작 단편 영화로,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등 장르 제한이 없다. 올해는 총 243편의 작품이 경쟁하고, 비경쟁부문은 일본 단편영화 감독의 작품들을 상영하는 ‘아시아 섹션’과 6월 항쟁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편영화를 상영하는 ‘민주주의 섹션’, 고시촌 영화제 운영위원 등의 작품을 상영하는 ‘프렌즈 섹션’ 등으로 진행된다.

구는 고시촌이 과거에는 가난하지만 연필 한 자루로 성공을 꿈꿀 수 있었던 기회의 땅이었다면 이제는 연필대신 문화예술로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되어 고시촌단편영화제가 영화를 꿈꾸는 모든 예술인들에게 열려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전국 지자체 최초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와이파이존 구축 기반으로 사물인터넷사업에도 박차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버스정류장, 구로디지털단지 전역과 공공이용시설, 안양천 일대, 학교, 공원까지 사실상 구로구 주요 전 지역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여 디지털 구로의 명성을 높였다. 주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소외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 전역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로구는 2015년 1월 무료 와이파이 조성 사업의 첫걸음으로 관내 모든 마을버스(84대)에 와이파이망을 설치했으며, 2단계로 2016년 8월 구로디지털단지와 구로역 광장, 신도림역 광장에 구축했다. 3단계로 2017년 8월에는 안양천 일대, 학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남은 지역에 대한 확장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이용방법은 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나 노트북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

해 ‘Public WiFi@Guro’를 선택 접속하면 된다. WiFi 이용 시 홈페이지 가입이나 인증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2016년 무료 와이파이존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구민 97.3%가 유용하다고 답했다. 실제 공공 와이파이 이용 현황 조사 결과 공공영역에서의 월 데이터 이용량은 구민 1인당 월 평균 510MB, 무료 와이파이 이용자의 경우 한 달 평균 7,000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로구는 와이파이존 구축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스마트도시로 도약 중에 있다.

올해 초 사물인터넷 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스마트도시팀을 만들었다. 스마트도시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혁신 거점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로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로디지털단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많고 구로구가 구축한 와이파이존이 구성되어 있어 사물인터넷 사업을 전개하기에 최적화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성 구청장은 “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으로 주민들에게 디지털 복지 시대를 더욱 활짝 열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금천구, 전국에서 인정받은 ‘청춘빨-딩’을 아시나요?

청년과 행정, 동행의 첫 시작

어디를 가든 지역아동센터, 노인정, 복지관 등 수요자별 맞춤 공간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20~30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에 가면 청년들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청춘빨-딩’이다. ‘청춘빨-딩’은 금천구와 비영리민간단체 꿈지락네트워크가 함께 운영하는 청년 활동공간으로 이용률이 낮은 청소년독서실의 기능전환을 통해 조성됐다.

1층은 운영·관리하는 ‘청년활동지원센터’ 사무실이 있다. 2층은 ‘세미나실’과 ‘청춘홀’이 마련돼 있다. ‘세미나실’은 예약제로 이용 가능하다. ‘청춘홀’은 청년과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코워킹스페이스로 개인 작업이나 스터디, 함께할 청년동료를 찾거나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3층은 함께 요리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청춘쿠킹스튜디오’와 ‘택이방’이 있다. 청춘쿠킹스튜디오는 요리에 필요한 집기류부터 조미료와 예쁜 접시, 테이블 등 있어 한 끼의 품격을 누리기에 좋은 공유주방이다. 택이방은 좌식공간으로 편히 쉴 수 있는 매트와 다양한 보드게임, 서적, 디자인잡지도 구비돼 ‘응답하라 1988’의 택이방처럼 편한 공간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또 다양한 관계형성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두잇’은 금천구에서 근무, 활동, 거주하는 3인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니티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와 공간을 지원한다. 청년프로젝트지원사업 ‘두잇+’는 커뮤니티 지원을 넘어 금천구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단체의 프로젝트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대식당은 혼밥이 지겹거나 요리가 자신없는 청년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청춘빨딩 3층에서 열린다. ‘사연있는 식당’은 매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이 모여 솔직하고 깊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Camp Next in 금천’ 학습공동체지원사업은 같은 주제로 학습하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습공동체는 청년조교와 함께 학습내용 및 전략을 교류하고 공동체간의 연계를 지향한다.

그리고 청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문화사업 ‘청춘씨-네마’와 ‘청춘빨-딩’과 함께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콜라보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청춘씨-네마’는 디렉터가 선정하는 영화를 ‘청춘빨-딩’에 모여서 함께 관람하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모임이다. 한 달에 한 번, 셋 째 주 수요일 진행되며 누구나 디렉터로 함께 ‘청춘씨-네마’를 꾸려갈 수 있다. ‘콜라보프로젝트’는 ‘청춘빨-딩’에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방식’대로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 개인과 동아리 모두 신청가능하며, ‘청춘빨-딩’ 공간과 온라인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

냉난방비 Zero & 화석연료 Zero

서울 노원구, 에너지 제로주택, 미래주택의 표준을 제시 한다

영국 런던과 업튼, 독일 프라이부르크, 핀란드 헬싱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세계적인 제로에너지타운이 있는 도시이다.

이젠 이 도시들과 함께 대한민국 노원의 이름이 덧붙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대, 그리고 최초의 에너지제로 주택 단지가 마침내 노원에서 그 모습을 선보인다. 2013년 국토교통부의 R&D 국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121세대의 에너지 제로주택이 4년여의 실험과 연구 개발을 거쳐 2017년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외단열·고기밀·열교차단·열회수 환기장치 등의 패시브 설계기술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지열 등의 액티브 기술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제로를 넘어서 에너지 플러스까지 실현하게 된다(건축물 5대 에너지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기준). 실험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이어지는 주택으로는 대한민국 최초이다.

에너지제로주택은 지난 7월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총 115세대 모집에 444명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 3.86 대 1, 최고 11.8 대 1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지구적 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써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노원은 하나의 실험을 더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만들어진 공간에 단순히 들어와 사는 것이 아니라, 청소와 방법 등 입주민이 직접 주택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제로주택은 화석연료 제로의 친환경 자립단지 모델일 뿐 아니라,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써 최초의 대단지 사례가 될 것이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 설계, 시공, 감리, 자재 등까지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탄생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에코빌리지로 발전하기를,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노원이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서울시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개관

분단과 대결의 상징에서 문화창작 공간으로



도봉구에는 한국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대전차방호시설'이 있다. 길이 약 250m에 이르는 군사시설로 유사시 건물을 폭파해 북한군의 통행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한때는 시민아파트의 역할을 했지만 이후 30여 년이 흐른 2004년, 건물노후로 아파트 부분은 철거되고 군사시설의 기능을 하던 1층 방호시설만이 흉물처럼 남아있었다. 이동진 구청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긴 이곳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품으로 돌려주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2013년부터 본격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민들과 함께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간 재생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예술가·시민을 대상으로 한 40여 회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15년에는 시민공유 작은 음악회와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어 폐허의 공간을 용서와 사랑의 멜로디로 가득 채우기도 했다.

2016년 12월, 관할 부대인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식'을 맺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10월 31일 마침내 개관식을 열었다.

연면적 1,902㎡(576평), 지상 1층 전체 5개동 규모로 새 단장을 마친 평화문화진지는 예술가와 주민을 위한 시민동, 창작동, 문화동, 예술동, 평화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m 높이의 전망대는 유사시에는 군사시설로 활용하고 평시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해 인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평화광장에 세워진 독일 통일의 상징 '베를린장벽'에도 주목할 만하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협조를 얻어 3점을 무상 기증받았으며, 평화문화진지가 지닌 역사성에 깊이를 더해줄 것이다. 향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워크숍, 체험교육 등을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펼쳐 서울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67년이 흘렀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문화 진지의 개관은 더욱 특별하다. 이동진 구청장은 "분단과 대결의 상징에서 평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변신한 이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평화로운 한반도의 꿈을 꾸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청년소셜벤처 엑스포 개최 청년소셜벤처와 함께 1000가지 혁신을 상상하다

지난해 잠재활동인구를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4%로 21세기 들어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소셜벤처'라 부르며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이 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4년부터 서울숲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청년소셜벤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이뤄왔다. 소셜벤처기업의 사회 혁신 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지난 11월 2~3일 성동구 서울숲 일대와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제1회 서울숲 청년 소셜벤처기업 엑스포(EXPO)」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000가지 혁신을 상상하다'는 주제로 성동구청과 루트임팩트, 마리몬드, 점프 등 8개 소셜벤처기업과 임팩트 투자가가 결성한 '서울숲 소셜벤처 EXPO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청년 사회혁신가들의 토크 콘서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0인의 청년사회혁신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진행된 가운데 사회 혁신 비즈니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10여개 소셜벤처기업에 사업개발비 2억 3천만 원을 지원하

는 '청년 소셜벤처기업 혁신경연대회'도 개최됐다. 아울러 참여기업 110여 개의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소셜벤처기업 창업·투자·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 기업의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이 최근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역 내 청년 사회혁신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동구는 소셜벤처기업과의 협업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 소셜벤처기업 지원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소셜벤처 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 정책의 원칙과 체계를 세운 최초의 법규다.

현재 성동구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술심리치료 과정에서 창안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만든 폰케이스와 다이어리, 가방 등을 판매하는 '마리몬드',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채용해 물류대행 서비스를 하는 '두손컴퍼니' 등 180여 개 업체에 3000여 명이 활동하며 '소셜벤처밸리'가 형성됐다. 특히 지난 10월 19일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710만 재외동포와 함께 남북화해 물꼬 튼다」

김포시, 제2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 개최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2017년 11월 28일 김포아트홀에서 제2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을 개최한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10만 재외 한인 동포들을 보듬고, 한인동포들과 함께 남북화해의 길을 열어가자는 의미로 김포시가 추진한 포럼이다. 올해 두 번째 행사다.

‘디아스포라’란 특정 집단이 기존에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뜻의 개념이다. 우리 민족은 1860년대 가난과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로의 이주를 시작으로 현재 170여 개국 720만 재외동포들이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평화’라는 주제로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을 통해 서로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아보고, 우리 민족이 세계 곳곳의 평화네트워크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북한과 맞닿아 있어 긴장감이 높은 김포시를 대표하는 평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문화도시 선언을 하였다. 기본조례 제정, 평화문화도시위원회 구성 등 기반을 마련하고, 디아스포라 포럼과 함께 평화문화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한강하구의 공동조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DMZ)와 달리 군사분계선이 없는 중립지역인 비무장수역이다. 우선적으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항행추진과 지형, 물길, 생태조사 등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중립지역 내 평화의 섬으로 알려진 유도(留島)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남북화해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김포시는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고, 문화적 소통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 인류 화합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즐거운 시민교육, 시민이 기다리는 시민교육, 시민에게 달려가는 공익성 시민교육”

성남시 공익성 시민교육, 지역기관들과 연계하여 공동기획·운영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013년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18,000여 개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간 접수되는 전자민원을 분석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필요한 시민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며, 비전도 세웠다.

성남시는 650여 개 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데, 2016년 예산기준 시민대상 직접 교육 예산만 390억 원, 사업수로는 1,500여 개에 달한다. 2013년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평생교육예산의 60% 이상이 취미, 교양, 여가 등 문화예술 분야에 실행되고 시민의식이나 참여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시민교육분야는 극히 미비한 수준으로 실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시민교육의 부재로 어느덧 우리 사회는 국가와 지역사회, 시민의 삶이 위협받고, 공동체 붕괴,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너무 늦었지만 시민교육을 국가, 시 등 공공영역이 돌려주어야 할 때다. 이에 성남시는 정부기관, 시의 각부서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시민강사 등 22개 기관과 협업하여 건강, 보건, 환경, 복지, 경제, 인권, 공동체 등 총 30개(17개 비예산)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만 6,0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정치적이고 딱딱하고 시민들이 관심 갖지 않는

시민교육을 즐겁고 유익하게 재구성하고 노인, 미취학 아동, 청소년, 장애인, 독거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했다. 각 대상별 다양한 체험과 시청각 자료 활용,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 공문제출, 홈페이지 회원 가입 등 불필요한 신청 절차를 모바일페이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문자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네이버 밴드 개발사와 협의하여 관리자 시스템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밴드를 활용, 신청부터 강의 마무리까지 100% 모바일로 관리하고 있다. 신청자인 시민과 협업하여 운영하는 각 기관,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되는 특성에 따라 강사까지 고려한 운영 방식이다.

그리고, 가장 낮고 취약한 곳을 배려하여 4개 권역 독거노인 대상 교육, 장애인 근로자, 특수학교, 가족 및 학부모 대상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생성되는 하나하나의 강의일지는 #생생강의일지 해시태그를 달고 SNS 세상으로 나아간다. 시민교육이 그렇게 날개를 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 시민의 일상적인 교육이 되길 바란다.





시흥시, 맞춤형 귀농귀촌지원으로 도농연대 상생모델 구축

논산시 · 영암군과 안정적이고 실패 없는 인생 이모작 지원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논산시, 영암군과 함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농촌생활을 원하는 도시민의 꿈을 응원하고 농촌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2015년 12월 간부회의에서 김윤식 시장이 직접 PT로 은퇴자의 새로운 인생설계에 대한 정책을 제안으로 시작된 이사업은 도농연대 상생발전을 위한 학습모임과 정책연구로 이어졌다. 지난 8월 17일에는 충남 논산시, 전남 영암군과 각각 도농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지방정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의 단순 지역특산물 판매나 행사 개최 정도의 교류가 아닌 도시민과 농촌이 서로 왕래하며,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새로운 도농연대 모델을 목표로 설정했다. 책임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이며 다양한 상생 발전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책부서와 농업부서가 함께하는 합동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시흥에서 지난 9월 25일 3개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농연대 시범모델” 주민설명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도농연대 시범모델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시흥에 있는 주택을 그대로 두고 농촌에 갈 경우 시흥시는 주택을 대신 관리하면서 사회주택으로 활용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분들에게는 임대소득 창출을, 신혼부부나 청년은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흥시는 농촌에서 활동영역 확장을 희망하는 사람을 발굴·교육해 논산시, 영암군에 연계하고, 논산시, 영암군에서는 이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지적응, 영농교육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세부적인 단계별 지원방안은 (1) 관심단계(사전교육) : 맞춤형 컨설팅, 현장교육(팜투어) (2) 결심단계(현지적응) : 체류형 농촌살이(2개월 살아보기) (3) 실행단계(사례별 실행) :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탄력적 지원 등이다.

시흥시는 “시범모델이 시민들의 새로운 인생설계와 도농연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견인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를 시작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도농연대의 새로운 선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전체가 캠퍼스” 시민의 삶을 성장시키는 오산백년시민대학

오산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도

물은 99℃에서는 끓지 않는다. 1℃가 더해져 100℃가 되면 그때 끓기 시작한다. 1℃의 중요함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것이다.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무엇, 바로 1℃, 도덕적 상상력과 환경에 적응하며 주변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교육’이다.

오산시(시장 박상욱)가 지역 전체를 학교로 운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오산백년시민대학’을 통해 지역 통합을 일구어내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오산백년시민대학은 ‘교육도시 오산’을 ‘백년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도시 전체를 대학 캠퍼스 구조로 재구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배움과 가르침을 실현함으로써 오산시를 학습형 지식문화 정보도시의 모델로 만들고 시민의 눈높이와 생활 속에서 배움과 가르침의 공동체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100년을 바라보고 사람을 가꾸는 시민을 위한 대학’, ‘100세까지 학습을 통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는 대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들이 강좌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물음표학교’는 삶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프로그램이라면, 퇴직 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시니어 대상 2년제 교육과정인 ‘느낌표학교’는 지역리더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간 수백여 개의 교육과정이 지역 곳곳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별로 위치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캠퍼스로 지정하고, 카페, 학교, 대형마트, 금융기관, 학원 등의 민간시설 252곳을 ‘징검다리교실’로 지정하여 지역 전체가 협업으로 운영되는 하나로 통합학습연계망이 ‘10분내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준다. 새로 구축된 오산시 교육포털사이트는 쌍방향의 참여와 소통 창구로 학습자·강사·활동가를 연결해주어 교육과정 접수, 학습공간 예약, 제약 없는 상시학습 지원, 개인학습 및 활동이력 관리가 가능하다.

지난 10월 25일~27일 오산시와 수원시 공동 개최로 열린 유네스코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Mid-Tern Review에서 오산시의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최고의 평생학습 실천전략”을 발표하였고, 오산시가 그동안 운영해 온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 사례인 1인 1악기 통기타 연주, 느낌표학교와 백년한글학교 학생 인터뷰 및 작품 낭독, 평생교육 활동가 소개 등 사례 중심 발표회를 가졌다. 아울러 다양한 혁신교육과 평생교육 작품 전시, 체험행사 운영으로 전 세계 195개국에서 온 교육 관계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시는 “교육은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시민 모두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학습시스템인 오산백년시민대학의 기반을 더욱 더 튼튼히 하고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18 영암 방문의 해 선언 ! 대도약의 서막!

전남 영암군(군수 정동평)은 지난 10월 30일, 제 42회 군민의 날을 맞아 2,000여 명의 군민과 향우들이 모인 가운데, 2018년을 ‘영암 방문의 해’로 선언했다. 군은 남도 문화관광의 중심지로서 관광객 3백만 명 유치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올해의 관광도시”선정을 목표로 더 큰 영암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2018년은 국립공원 월출산 지정 30주년을 기념하고, 군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57회 전남 체전 성공 개최와 왕인문화축제의 국가 우수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해로 문화관광의 르네상스시대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중 개최되는 각종 문화축제 및 체육행사와 가아금테마공원, 국민여가캠핑장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기찬랜드내 문화콘텐츠 집적화와 고객 맞춤형 공격적 마케팅으로 관광 및 방문객 수요를 대폭 창출해 지역 상권 부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준비기간을 갖고 2018년에 계획된 각종 축제와 행사 등을 총망라해 일제조사와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TV 프로그램을 통한 기획 홍보와 언론·방송인, 여행사 및 자매결연 지자체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군정 소식지 발간과 대형 현수막 설치 및 다중이용시설 광고 홍보와 대중교통시설 랩핑광고도 추진한다.



SNS를 활용한 영암 맛집 소개, 블로그 포스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관광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관광객에게 제공하게 된다. 왕인문화축제와 월출산 국화축제 기간 중 관내투어 실시와 관광객 방문 후기를 공모하고 대도시 여행업 협회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암만들기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1회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군민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군민 자율적 쓰레기수거 및 청소 실시와 1단체 1구역 책임 담당제 운영과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등도 병행하게 된다. 2018 영암 방문의 해 선언으로 6만 군민과 16만 향우가 함께하여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 관광객 3백만 명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계획이다.

전남 완도군, 미래 전략산업으로 해양치유단지 조성

국가지원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다양한 해양치유자원 보유로 국내 최적지로 평가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인구 고령화로 웰니스, 헬스케어 등 건강증진사업에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의 특화자원인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양헬스케어산업을 미래 완도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군정의 중점 시책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다. 해양치유 산업은 해양자원(해양기후, 해수, 해양생물, 해니 등)을 이용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관광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해양분야 신산업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지난 8월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을 개발해 해양관광 대표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안지역의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실용화 연구 협력 지자체 선정” 공모를 실시했으며, 엄격한 발표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완도군을 포함해 최종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앞으로 2년간 선정 지자체와 해양치유산업 개발사업 연구단이 협력하여 국비 35억 원을 포함, 지방비 16억(지자체별 4억) 총 51억 원의 사업비

를 투입해 해양치유 연구·개발 지원과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해양치유 실용화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4월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기간 중에는 독일, 베트남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양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고, 유럽 해양헬스케어의 가장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노르더나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헬스케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국가지원 해양치유자원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완도군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해양헬스케어 산업을 지역의 특화자원인 해조류, 해양기후,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미래 완도 100년의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읍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Slow tour),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정읍시, 전국 유일의 구절초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읍시(시장 김생기)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떠오른 구절초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산내면 구절초테마공원 일원에 구절초 경관을 위한 부대 시설을 조성하고 매년 구절초 축제를 개최해 전국적인 명품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구절초 직접 재배와 구절초 차, 베개, 한 등 가공상품 생산기반을 다지고 2013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완료하는 등 구절초 향토자원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으로 추가성장이 둔화된 데다 타 지자체의 구절초 자원개발이 두드러지는 등 대외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새로운 발전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구절초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관광활성화 그리고 연관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읍 구절초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고, 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정읍시 산내면 전체 지역 6,498ha가 2015년 11월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로 지정되어 전국적인 향토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구 내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초지법·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총 7건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구절초 육성과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는 등 법적 특례의 직접적 효과와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간차원의 투자 및 개발이 활발해짐은 물론 '구절초하면 정읍'이라는 이미지 상승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정읍 구절초축제는 지역대표축제이자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굳혀 매년 10월 축제 기간에 전국에서 60만 명 이상이 다녀가고 6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구절초 축제를 개최하여 사상 처음 8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 전국 가을대표 축제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정읍 구절초는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자체별 야생화를 대상으로 추진한 전국 10대 지자체 상징 꽃으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산림청 주관 2018 지방정원 사업대상지 선정, 생태테마관광 육성 공모사업 선정, 캠핑파크 등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등 전국적 관광명소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였다.

시는 정읍 구절초 연관 산업을 더욱 확장성있게 육성시키기 위하여 구절초 생산기반 강화 사업과 구절초 관광활성화 사업, 구절초 부가가치 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 육성사업, 구절초 지방정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구절초 테마공원과 정읍 구절초축제를 더욱 확대 성장시킴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당진의 도전’이 시작된다

충남 당진시, 체계적인 4가지 전략 수립을 통한 차별화된 청년정책 추진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내일이 설레는 청년 당진’을 비전으로 당진만의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는 물론, 사회 참여, 주거, 보육, 문화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청년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설자리(기반·소통)’, ‘일자리(취·창업)’, ‘살자리(주거·보육)’, ‘놀자리(문화)’라는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설자리(기반·소통)분야로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청년정책 추진단 구성,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그리고 충남 최초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적 동력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당진 청년센터를 설치하는 등 10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취·창업)분야에서는 시군구 최초로 추진되는 맞춤형 청년인턴제, 청년 취업 사관학교, 취업준비생 전용 도서관, 청년 창업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청년 창업 특례자금 조성, 청년 창업농 육성 조례 제정, 민간분야 청년 생활 임금제 도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살자리(주거·보육)분야에서는 취업준비생 주거 환경 위기자 지원, 아동 돌봄 공공서비스 확대, 방과 후 마을 학교, 아이 돌봄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놀자리(문화)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청년모임의 활동을 활성화 하는 ‘지역사회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해나루 달빛 학습존을 운영하는 한편, 당진만의 청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17 당진 청년의 날’, 청년 영화학교를 추진하고 당진 청년센터 내에 청년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당진 청년센터는 구 군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홀, 세미나실, 공유서재 등 소통·문화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 창업 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취업준비생 전용 도서관 등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청년 동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사업인 민간분야 ‘청년 생활임금제’ 도입은 현재 공공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를 민간분야의 청년층까지 확대하여 회사임금과 생활임금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대상은 재정의 수용성, 사회적 합의성, 법적기준의 명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의회, 시민과의 토론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물론 정책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멎는 곳이 너무나 많아 총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청년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종합처방약으로 치료해야한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보약과도 같은 당진형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명 / 참여 / 분권

생명도시 시흥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Nonsan 논산시
양촌꽃감특구지정
도시사 품질추천 '으뜸' 인증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2008 대한민국 우수특산물
동고동락 同苦同樂

제15회 양촌 고갯길 축제

감빛 물결이 넘실대는
청이 물처럼 흐르는 햇빛촌

2017
12.9 |토| ~ 10 |일|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체육공원
개회식 14시
꽃감가요제 / 메기잡기 체험 / 감깎기 체험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 양촌꽃감판매장 운영



개막 축하공연
김성환 외 유명가수 출연

주관 양촌꽃감축제추진위원회 <http://gotgam.nonsan.go.kr>



해나루는 '바다'와 '고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는 프리미엄 쌀 브랜드입니다. 해나루는 '바다'와 '고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는 프리미엄 쌀 브랜드입니다.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 쌀의 자존심 대한민국 一味 **해나루쌀**

The pride of Korean rice reaching out to the world
HAENARU, the best premium rice of Korea

당진 해나루쌀 수상 실적

2008	• 고객만족 우수기업 TOP 브랜드 수상 • 해나루쌀 농수산물 수출품 수상
2009	•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2010	•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대상
16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 대상 수상(수출부문)	
2012	•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대상 • 상반기 히트상품 • RPC 대표 브랜드 쌀 •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당진 해나루쌀 인증 현황

Haenaru Rice is Certified by the Following

국제품질인증(ISO9001)
ISO 9001 :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국제환경인증(ISO14001)획득
ISO 14001 : mee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s
충청남도지사 품질 추천 농특산물(Q마크) 획득
Q Mark : recommended by the Chungnam governor on Korea
우수농산물관리시설자정(GAP)인증(1315-024)
1315-024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당진 농특산물 구입안내

- 전 화 : 당진시농산물연합판촉팀
전화 : 041)350-4989
- 인터넷 : www.dangjinfarm.com
(한글도메인 검색: 당진팜, 해나루쌀, 당진쌀)



대한민국 해양헬스케어산업의 중심지 완도군

국가지원 해양헬스케어산업 선도 지자체 선정 (2017.10.17)

해양헬스케어산업

해수, 해양기후,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의·과학적으로 입증된 해양치유요법에 활용하여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면역 질환을 자연적으로 치유하고
인지능력 개선과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는 활동으로,
의료산업 및 관광산업과 융합한 해양분야의 신 산업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 2017년 11월

통 권 제13호

발 행 연 2회

등 록 2011년 7월 19일

등록번호 종로 사 00400

발 행 처 희망제작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평창동, 비전빌딩 2~4층)

tel - 02, 3210, 0909/ fax - 02, 3210, 0126

www.makehope.org

발 행 인 이동진

편 집 장 권기태

편집위원 송정복 박홍석

디 자 인 DNC www.thednc.co.kr

인 쇄 석천P&B

발 행 일 2017년 11월 20일

정기구독문의

목민관클럽 사무국 tel- 02, 2031, 2113 / wolstar@makehope.org

하나은행 145-910005-98804

정가 10,000원

이 책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목민광장의 입장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민광장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 책은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재생용지로 만듭니다.